

2019
02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덕담이 오가는



기원합니다



행복한 명절을



따스한 마음과

국회보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27, February 2019

[표지이야기]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설날을 맞아, 매일이 새날인듯
국민의 삶에 희망을 채워가는
국회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발행일 2019년 2월 1일

발행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편집인 이춘규 홍보기획관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한공식 위원장(입법차장)

김승기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위원(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용준 위원(법제실장)

이상목 간사(미디어담당관)

편집실무위원회

윤상은(보좌관), 제방훈(보좌관), 최정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중해(취재보도 사무관), 김현아, 고영선, 박민선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문화상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등 신년업무보고 받아

3·1운동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2019 국회 신춘음악회 개최

특집_ 5G 상용화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10 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 가져올 5G_ 김지환

12 5G 상용화와 4차 산업혁명_ 홍인기

14 5G 상용화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_ 신민수

16 5G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_ 김연하

18 위원장 초대석_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정쟁에서 민생으로, 법사위가 바뀐다

20 길에서 길을 찾다_ 홍문종 의원
사통팔달 행복도시, 의정부

24 칭찬합시다_ 유의동 의원
평택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동행'

26 나의 애송시_ 홍의락 의원
나 하나 꽃 피어





- 28 나의 인생 나의 정치_ 김성환 의원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고파”
- 30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철도사고, 온라인 로스쿨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34 법률 시대를 읽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_ 임재봉
- 36 기고
‘한눈에 보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법률’ 발간_ 이용준
- 38 주재관 리포트
전환점 맞이한 중국의 공유자전거 정책_ 김형진
- 40 법 시행 현장을 가다
‘철도안전법’
- 42 만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44 위원회는 지금
국회, 대학병원 교수 피살사건과 KT 통신구 화재 등 논의
- 48 국회 뉴스
- 51 국회스케치
- 52 임시의정원 사람들
‘임시의정원법’을 기초한 신익희·손정도·조소앙·이광수_ 한시준
- 55 생활 속 우리말글
같은 소리, 다른 표기_ 김미형
- 56 경제이야기
부채를 위한 변명_ 이진우
- 58 취재수첩
네 할 일을 하라!_ 권지윤
- 60 미래과학을 읽다
스마트 문신이 알려준다_ 고희관
- 62 오천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매병과 청자 참외모양 병_ 이광표
- 65 그때 그 사건
신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장외투쟁 나서
- 66 역사 속 길을 찾아
임 그리는 자쫓빛 사랑이야기_ 장태동
- 70 정치 관련 주요 일지
- 72 편집 후기
새봄맞이 심기일전_ 이춘규



“2019년은 국가 백년지대계에서 분수령이 되는 해”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등 신년업무보고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이 1월 17일 국회접견실에서 2019년도 신년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17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2019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9년은 국가 백년지대계에서 분수령이 되는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회 모든 소속기관들이 심기일전해 백년사, 천년사에 남을 한 해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원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면서



신년업무보고를 받은 후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

동시에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는 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통해 대접받는 나라가 됐고 촛불혁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골고루 잘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는 못 미쳤기 때문에 올해 국회가 개혁입법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 정치개혁의 주체는 “정당과 국회, 선거제도인데 현재 선거제도 개혁이 막혀있는 상태”라며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으로까지 연결돼야 정치개혁이 될 수 있는 만큼 2019년이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당부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일뜩 국회, 투명한 국회 실천할 것”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 신년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국회 특수할

동비 폐지, 업무추진비 상세 공개, 위탁연구용역 전면 폐지 등 국회 개혁에 힘써왔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평소 강조하신 바와 같이 올해도 우리 국회가 1%라도 국민의 신뢰를 올리기 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아껴 쓸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에 대해서도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사전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고, 결과보고서도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안심사소위원회 활성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모든 국회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돼 밀린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소위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투명한 국회, 알뜰한 국회를 실현해 올해 말쯤에는 1.8% 수준인 국회의 신뢰도를 5%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협치와 소통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위한 기반 구축

이어진 신년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초 제시한 ‘협치와 소통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현안에 대한 여야협의체 제도화와 국회의장의 조정기능 강화 및 소통 채널 구축으로 협치를 통한 원활한 국회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전자국민청원 제도 도입, 의회외교의 투명성과 합리성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산 구조조정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사전공표 확대, 정보공개 청구제도 및 시스템 운영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섬기는 소통의 국회’를 실현하며, 법안 처리율 제고와 위원회 및 법제실의 인력 확충 지원, 법제업무 효율화 및 표준화, 소위원회 활성화로 법안급증에 대응하고, 민생법안 등 주요 안건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만들어 국민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또 임시의정원 100주년 행사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의회외교, 법률안과 의안 등 핵심 입법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형 서비스의 고도화 등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향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데이터를 확충하고 입법지원 서비스를 혁신해 세계적 도서관으로 도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전문기관으로 전문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예결산 심사와 재정수반 법안 심사를 지원하고 경제전망 분석과 재정전망 분석 등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입법수요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대를 선도하는 의정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

3·1운동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2019 국회 신춘음악회 개최



2019 국회 신춘음악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3·1운동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1월 29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2019 국회 신춘음악회’를 개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민 화합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회와 국민이 우리의 소리를 통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신춘음악회를 개

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춘음악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5부 요인,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7대 종단대표,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경제계·노동계 등 각계 대표, 주한외교사절, 독립유공자 및 후손, 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음악회는 국악의 대중화에 힘써 온 원영석의 지휘로 한국방송(KBS) 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종묘제례악 보태평지무-희문’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국가무형문화제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인 죽향 이생



신춘음악회에 앞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만찬에서 문화상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 명인이 ‘이생강류 대금산조’를 연주했다.

다음으로 국악신동 김태연이 홍보가 중 ‘박타는 대목’과 ‘배 띄워라’를 불렀으며, KBS국악관현악단이 자진모리 장단으로 구성된 ‘얼씨구야’를 풍성한 선율로 연주했다.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인 이춘희 명창이 태평가, 뱃노래 등을 연곡으로 부르며 경기민요 특유의 밝고 흥겨운 기운을 전하고, 젊은 소리꾼인 유태평양·김준수·고영열이 윤복희의 ‘삶’과 신재효의 ‘광대가’를 자신들만의 색깔로 재구성해 선보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KBS국악관현악단의 ‘아리랑 환상곡’연주에 맞춰 진 출연진이 화합의 대합창을 선보이며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방송(KBS 1TV) 설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2월 5일 12시 10분부터 80분간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음악회에 앞서 문화상 국회의장은 4부 요인, 정당대표, 7대 종단 대표들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먼저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고 문화강국이 된 이 시점에 국회에서 국악 신춘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통합하고, 단합하고, 하나로 묶여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새 봄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문화상 국회의장은 “공연 무대인 국회의사당 중앙홀은 원형에 돔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상징성이 있다”면서 “국민통합 위에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멋진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만찬 후 참석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중앙홀로 자리를 옮겨 음악회 사전 리셉션 행사를 가진 뒤, ‘2019 국회 신춘음악회’를 관람했다. 📺



특집

5G 상용화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지난해 12월 1일 우리나라가 5G(fif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전파를 발사하며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언한 데 이어 새해에는 5G 스마트폰과 5G 융합서비스가 잇달아 등장할 전망이다. LTE의 최대 속도(1Gbps)보다 20배가량 빠르며 처리용량도 100배 많아 가상현실(VR),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는 5G 상용화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부처 협업, 과감한 투자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2월 특집에서는 전문가들로부터 우리나라가 5G 활성화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 가져올 5G	김지환 박사
5G 상용화와 4차 산업혁명	홍인기 교수
5G 상용화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신민수 교수
5G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김연학 교수

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 가져올 5G



김지환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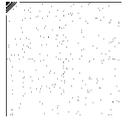
작년 12월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그룹 회장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이자 화웨이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인 명완저우(明萬鈞)를 체포한 이후 화웨이 견제 기류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국 기업인 화웨이는 전세계 통신장비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지만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화웨이를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중국이 5세대 이동통신(5G)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를 장악할 경우 미국 안보와 기술 우위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5G 핵심 서비스 특징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이보다 앞선 작년 3월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전세계 반도체 4위이자 통신 네트워크 전문 업체인 싱가포르의 브로드컴이 전세계 반도체 3위이자 모바일 반도체 1위 업체인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려던 계획을 불허했다. 마찬가지로 5G에서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중국 기업에 주도권이 넘어가는 사태를 우려한 결정이었다. 중국 역시 5G에서 시장 확대를 노리고 차량용 반도체 선두 업체인 NXP를 인수하려던 퀄컴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5G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은 5G를 단순히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국한된 이동통신 기술로만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미국 통신사업자 버라이즌의 CEO는 5G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지금까지 무선통신 기술에서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이자 ICT(정보통신기술) 혁신 플랫폼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기반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빠른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기존 이동통신 기술과 달리, 5G 핵심 서비스의 특징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다. 5G의 최대 전송속도는 4G LTE 대비 20배 향상된 20Gbps로 UHD급 초고화질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송 지연 시간은 4G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해 차량간 통신, 원격 정밀 제어 등의 촉각을 다루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연결 가능 기기 수는 제곱킬로미터당 100만 개로 4G 대비 10배 증가한다. 따라서 5G는 고유한 요구사항을 가진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가상적으로 구분해 활용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5G의 특징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서로 다른 특성과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에 특화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용망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에지 컴퓨팅도 중요한 특징이다. 모바일 에지 컴퓨팅은 사용자에게 인접한 기지국에 분산 서버를 배치해 전송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보안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작년 12월 첫 전파를 발사한 우리나라에 이어 2020년까지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5G가 상용화될 것이다. 이제 첫걸음을 떼려는 5G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2020년부터 5G는 미디어, 자동차, 제조, 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과 사회 분야에 적용되어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가깝게는 5G가 미디어와 이동통신의 융합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초고화질 영상은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의 양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나 아직 대중화가 지지부진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분야는

5G로 기기 가격이 저렴해지고 사용자 경험이 개선되면서 사용자가 늘고 콘텐츠가 증가하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본격화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5G와 융합한 자동차인 커넥티드카는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다. 차량이 직접 주변 차량, 도로 인프라, 기지국, 중앙관제센터와 빠르게 통신해 스스로 길을 찾아가며, 원격 운전도 가능해진다. 핸들에서 해방되는 운전자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진화해 커넥티드카는 생활공간이 될 것이다.

제조 분야에서는 공장 내 설비와 센서가 연결되고 지리적으로 떨어진 여러 공장들이 하나의 공장처럼 연결되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5G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센서와 기기를 연결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를 뒷받침하는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5G는 모든 산업과 사회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

전기, 인터넷과 비교되는 5G는 모든 산업과 사회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주위의 모든 것을 인터넷에 연결시키고 다른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4G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산업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돌아켜보면, 5G 상용화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

다양한 혁신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5G는 전통적인 산업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비즈니스 모델, 산업 생태계, 경쟁의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 전 산업에 걸쳐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유통·소비되는 새로운 방식이 출현하고 그에 따라 조직과 제도는 물론, 우리의 능력과 생각도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

5G 상용화와 4차 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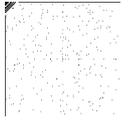
홍인기 교수
경희대 전자공학과

대한민국은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비단 5G뿐만 아니라 3G, 4G를 가장 먼저 상용화하는 상징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했고 전세계가 이동통신의 새로운 시장을 테스트하는 시험대로 인식하고 있다.

5G 이전까지의 이동통신은 유선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무선을 통한 이동성을 보장해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즉, 무선을 통한 신호 전송은 유선을 통한 신호 전송에 비해 훨씬 어려워 높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2G까지는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유선전화를 이동 중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3G, 4G 시대에서는 유선 인터넷에서 즐기던 데이터, 동영상 등의 서비스를 이동통신 기술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통신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유선에서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발전시켜왔고, 이를 위해 전송 속도 측면에서는 유선통신에 버금가는 속도를 이동 중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LTE가 대표적인 이동통신 방식이 된 현 4G 시대에서는 이동통신의 전송 속도가 이미 유선통신에 버금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유선에서 누려왔던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동 중에 즐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동안의 이동통신 진화 방향은 이동 속도의 한계를 높여가면서도 신호의 전달 속도를 같이 올려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이 탄생할 수 있는 바탕 마련

5G는 더 이상 속도만의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신호 전송에 걸리는 지연 시간을 대폭 줄여 촉각까지도 전달할 수 있도록 했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통신 기기의 배터리 수명을 현저히 늘렸으며, 단위면적당 많은 수의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술 진화를 바탕으로 하



고 있다. 4세대 이동통신까지는 기존에 누리왔던 통신 서비스를 이동 중에 서비스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5세대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서비스가 개발되고 새로운 산업 영역이 탄생할 수 있는 바탕이 제공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은 5G가 추구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 영역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읽을 수 있다. 그동안의 이동통신 서비스 범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음성, 데이터, 동영상 등의 대부분 서비스의 대상은 사람이었다. 5G 시대에서는 그 서비스 범위가 사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혹은 만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 환경에서 사람과 사물이 만들어내는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가 모아지고 이들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등을 통해 처리해 실세계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해 산업 전반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인간에 비유한다면 각종 기기들은 인간의 각 신체기관에 해당하고, 각 기기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인간이 느끼는 감각정보, 인공지능은 두뇌에 해당하고 5G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신경망에 해당할 것이다. 5G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경망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막힘없이 적재적소에 연결을 제공하면서도 그 연결이 없는 듯 있는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원 혹은 해결해야 할 주요 요소로는 요금제, 데이터 중립성, 산업 간의 융합 등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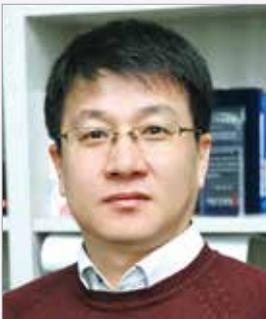
적절한 요금제는 신경망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용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고 높은 요금은 이용에 제한을 두어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방해가 되고 너무 낮은 요금은 건강

을 위한 의료보험도 지불하지 못해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워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요금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 요금제는 이동통신 사용주체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동통신 기기 사용자 단위로 이용요금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는 수십억 개에 달하는 기기들을 연결할 때 기기에 대한 요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책정할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데이터 중립성은 어느 신체기관에서 인지하는 감각정보 모두가 동일하게 흐르고 이들 정보 모두를 차별 없이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비유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향후 각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자동차회사, 통신사업자, 도로공사, 혹은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청 등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를 관련 주체들이 서로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를 어떤 수준까지 공유하고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데이터 중립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산업간의 융합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와 통신회사가 융합되는 자율자동차, 로봇과 생산 공장, 통신회사가 융합되는 스마트 공장, 건설과 도시 환경 서비스, 인공지능 등이 연결되는 스마트 도시 등이 구현될 때 이들 산업 간의 장벽이 없어야 하고 관련 주체간의 적절한 이익 분배 또한 중요하다. 인체 각 기관이 서로 하나인 것처럼 융합에 관련된 산업들이 하나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충분한 이해와 비전의 공유, 적절한 이익의 분배에 대한 다양한 통찰이 필요할 것이다.

5G의 상용화가 4차 산업혁명의 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체 신호 모두가 신경망을 통해 원활하게 흐르는 것처럼, 사람과 사물들 간의 정보가 5G를 통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G 상용화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신민수 교수
한양대 경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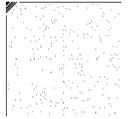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연결성이 핵심가치로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창출이 개인은 물론 산업의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5G는 4차 산업혁명시대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이다. 그동안 5G 네트워크 조기구축과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5G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5G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 사항이다. 효과적 5G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쟁력 혁신 과정에서 우려되는 위험들로는 ‘지속 가능한 5G 생태계 구축의 필수 요소인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 가능성 여부에 관련된 정책적 위험’, ‘소비자의 불확실한 지불의향 및 그에 따라 단시일 내에 본격화하기 어려운 수익 창출 등에 따른 시장 형성 가능성 여부에 관련된 기능적 위험’ 그리고 ‘5G 생태계 등장에 따른 사회·경제 패러다임 및 5G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대응 가능성 여부에 관련된 아키텍처(Architecture) 위험’ 등이 있다.

많은 정책들이 이러한 위험들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되어야 하지만, 5G 상용화 초기 시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정치적 위험과 기능적 위험에 관련된 규제 개혁이다. 정치적 위험과 관련된 규제 개혁의 중심축 중의 하나는 망 중립성 정책이며, 기능적 위험에 관련된 규제 개혁의 중심축 중 하나는 통신비 정책이다.

시장 참여자간 수익과 비용의 배분 공정 유도해야

산업 발전의 촉매인 5G 시장의 최종 승리는 세계 최최 타이틀이 아닌, 5G를 통한 차별적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의료·제조업 등 전통적 산업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다양한 형태의 품질과 서비스 출현을 지원하는 시장과 정책적 환경이 이러한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인터넷 시장 구조 및 환경의 변화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한 망 중립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맞추어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은 '5G 기반의 참여와 혁신 네트워크 구축', '산업간 융합과 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형 산업 생태계 활성화', '융합 생태계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공정 경쟁 및 상생 환경 구축' 등을 목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쟁과 혁신 시장을 지향하는 공정 상생 정책 수립', '수익과 배분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하는 망 공정성 정책 수립', '투명성 강화 기반의 소비자 후생 증대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공정 상생 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방향은 CPND(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 생태계 참여자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에 따른 혁신 능력 저하 방지이며, 이 과정에서 중소 CP(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발해 중소 CP 보호 및 육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5G 시대에 부합하는 망 중립성의 명확한 개념과 산업별·서비스별 적용 범위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망 공정성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5G 시대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시장 참여자간 수익과 비용의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망 중립성 정책의 세계적 보편성을 고려하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부합하는 망 중립성 정책 개선을 위해 이용자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명성 등은 유지하되, 경제적 관리 자유도는 증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투명성 강화에 기반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규제와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망 중립성 정책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 경

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수준의 요금 책정 필요

5G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5G 요금에 관련된 통신비 정책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5G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생명 주기를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요금 체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한 후 가입자를 모집해야 하므로, 서비스 초기에는 막대한 원가가 발생하는 반면 수요가 미미해 원가보상률이 매우 낮은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5G 서비스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수준의 요금 수준을 책정해 네트워크 확대와 가입자 확보의 선순환이 구축되도록 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5G 서비스 초기에 인위적으로 매우 낮은 요금이 책정될 경우, 네트워크 산업으로부터의 네트워크 공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5G 서비스 요금은 수요 특성을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산업 인프라 혁신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5G는 2022년까지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가 소비하는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낮은 요금 때문에 가입하는 소비 특성이 아닌 5G가 제공하는 품질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5G는 단순히 'G' 앞의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및 산업 인프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에 맞추어 요금 정책도 5G 서비스의 수요 특성과 주요 용도를 반영하는 가치기반 요금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

5G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김연학 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작년 12월 1일 우리나라는 이동형 5G전파를 발사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5G 상용국가가 됐다. 미국의 AT&T나 버라이즌이 우리보다 먼저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서비스는 고정형 무선서비스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5G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작년 시작된 5G 상용서비스는 일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징적 서비스의 성격이 크지만 금년 3월에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대중들도 5G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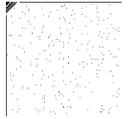
이처럼 우리나라가 5G 상용서비스를 서두르는 이유는 이것이 국가경제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5G의 조기상용화는 통신장비산업, 단말기제조업, 콘텐츠 산업과 플랫폼산업 등 IT생태계를 함께 발전시키는 등 전후방 관련효과가 매우 크다.

5G는 203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최소 47.8조 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KT경제경영연구소는 추산하고 있으며, 시장조사기관인 IHS는 5G 관련산업이 2035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약 2천200만 개의 일자리와 12.3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한국에만 96만 개의 일자리와 1천200억 달러의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G 조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5G는 조기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5G망을 깔아야 하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기투자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5G망을 구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새로운 수익모델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G망이 구축되면 B2B(기업고객대상)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5G망 구축 후에도 상당기간 주력시장은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전통적인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시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통신요금의 점진적 인하와 이를 통한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5G망을 통해 이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신규 수익모델이 불확실한 상황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5G에 대한 대규모 조기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파수할당방식 변경과 망중립성제도 재검토 필요

따라서 통신사업자의 투자회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해소와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주파수할당방식 변경을 통한 투자비 부담경감이다.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4%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매출 대비 주파수할당대가 비중이 2.65%, 미국은 2.26%, 일본은 0.73%, 영국은 1.68%, 독일은 3.01% 수준이다.

이처럼 해외사업자 부담은 국내 이통사의 평균 4%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우리와 규제철학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우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주파수할당대가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도 매년 2천400억 원 정도를 내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5G 주파수 1차 할당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향후 추가 주파수할당과 주파수재할당시에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이통사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파수할당대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망중립성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망중립성이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는 인터넷

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콘텐츠, 플랫폼, 장비, 전송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망투자비용을 전담하고 있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기기와 대용량 콘텐츠의 확산으로 인해 네트워크 투자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수익모델은 제한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OTT (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도 망이용대가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외의 경우에도 구글이 프랑스의 오렌지텔레콤에게,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망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해 지불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망중립성정책을 폐기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셋째, 5G 서비스 조기활성화를 위한 역무체계 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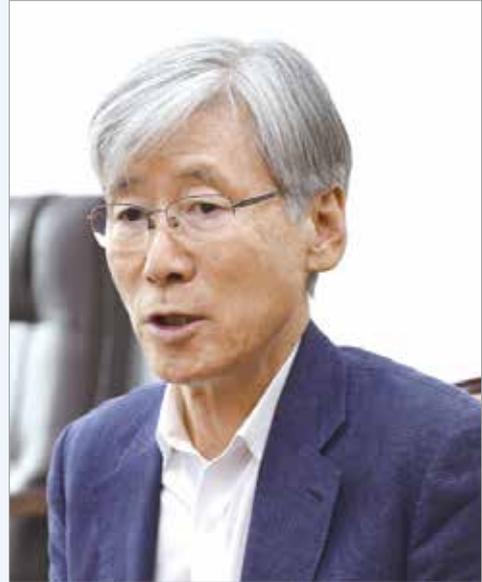
앞서 5G망을 활용한 신규 수익모델이 부족함을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수익모델이 부족한 상황에서 망구축 의무만 강조되면 통신사업자는 투자유인을 가지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망구축 의무는 관련산업의 발전속도에 맞춰서 부과함이 바람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이 망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킬러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수직적인 칸막이 규제를 통한 역무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통신사업자의 다양한 킬러서비스개발은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통신사업자들이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평적 역무체계를 지향해 규제를 완화해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타 산업과 사업자와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치밀한 로드맵을 정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정쟁에서 민생으로, 법사위가 바뀐다”

법제사법위원회실에는 한자로 쓴 편액이 걸려 있다. ‘국익우선 법사위(國益優先法司委), 법치수호 법사위(法治守護法司委), 품위유지 법사위(品位維持法司委)’라고 적힌 글귀를 바라보던 여상규 위원장은 “위원회를 이 글귀대로 운영해 위원들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품위 있는 모범 상임위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3선의원이다. 판사 시절 그의 동료들은 여상규 의원을 두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워낙 상식선에서 행동하는 사람이라 그와 관련된 일화가 거의 없다”고 그의 인품을 평가했다고 한다. 다만 법복을 벗은 사연은 애절하다. 장래 ‘대법관’감이라는 평판을 받던 그가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법복을 벗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별세했고, 이를 본 동료 법관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복직을 청원했다는 일화는 그가 정치인보다는 법관에 더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각오는 남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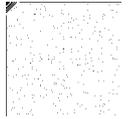
“지난해 7월 16일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가졌던 국익 우선과 법치 수호, 품위 유지라는 마음가짐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켜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경제 살리기 법안과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국가경제에 일조하는 상임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민생경제가 살아나 국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

기를 희망한다는 여상규 위원장은 “당략보다 국익을 지켜 갈 것”이라며 법사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 안으로 정치를 끌어들이는 일들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판사들이 정치에서 초연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법원마저 보수와 진보로 편을 갈라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사법행정에서도 그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기용하는데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를 운영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원이 큰 혼란을 치르게 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하면서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은 꼭 막아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생각의 일단을 피력했다.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의 사법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



를 가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얽힌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어느 한 기관이 독주하는 체제는 옳지 않고, 양 기관의 협력과 적당한 견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정치권이 아닌 검찰과 경찰이 직접 부딪치고 협의해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경찰의 조직 정비이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경찰은 지자체 소속으로 두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이런 기관을 가진 외국의 입법례가 없을뿐더러, 어떠한 안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이에 어긋나는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역시 어려울 것이고 야당 탄압 도구로 쓰이는 등의 권한 남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사위, 법안의 저수지로 만들지 않을 것”

국회에서 법사위는 타 위원회와 달리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월권’ 논란이 일기도 한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 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 “법사위는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도 최종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있지만 상원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전체의 취지가 체계와 맞는 법인지는 법사위가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들이 서로 상충되는 일이 생기면 국민들이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도 모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체 체계를 심사하는 기회는 반드시 있

어야 합니다. 이같은 체계·자구 심사는 법사위 고유 권한입니다.”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와 상관없이 법안 내용을 다시 심사하는 식의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을 넘지 않고 본래의 기능에 충실히 임해 더 이상 법사위가 ‘법안의 저수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의 협치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법원에서는 실제적 진실에 바탕을 두고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정답이라면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여야 간 쟁점에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양측 의견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해답을 찾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여야 협의를 통해 끝까지 쟁점을 풀어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장을 맡으면서 “당리당락에 치우치지 않는 법사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몇 번은 큰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하는 위원들을 제지하다 큰소리를 친 적도 있다”며 회의 운영의 어려움을 고백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야 위원들이 조금씩 제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여당 위원들도 법사위원장이 야당 출신이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주는 것 같아 고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조인 티를 못 벗고 법사위 운영을 원리원칙대로 하려다 보니 한편으로는 정치적 융통성이 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모쪼록 올 한해에도 협치를 통해 ‘일하는 법사위’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국회의 가장 주목받는 위원회 중 하나인 법사위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두 배로 일할 것”이라며 “국가와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사동팔달 행복도시, 의정부

홍문중 의원

자유한국당, 경기도 의정부시을

절기로는 입춘이지만 실제 날씨는 한겨울이다. 봄을 기다리지만 여전한 추위에 봄 애기 꺼내기가 망설여질 때쯤 입춘 절기를 만나면 봄 애기도 싹을 틔운다. 삭풍이 닥쳐도 이 바람은 겨울의 끝물이라며 만만하게 대한다. 봄기운에 불을 댕기는 발화점 같은 입춘이다. 몸은 추우나 마음만은 봄인 2월에 도봉산 만장봉이 저만치 바라보이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홍문중 의원을 만났다.



의정부시의 관문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 내리면 넓은 공원이 펼쳐진다. 과거 미군부대였던 공원에는 안중근 의사 동상과 3·1운동 기념비, 평화의 소녀상 등이 세워져 있다. 동상 앞에 선 홍문중 의원은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해여서 동상과 기념비를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르다”며 “선열들이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같다”고 했다.

길을 건너면 의정부시의 중심 상권인 행복로가 이어진다. ‘의정부의 명동’이라 불리는 이 거리의 초입에는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고 있는 기마상 동상이 있다.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동상이다. 시의 이름 ‘의정부’는 여기서 시작된다.

홍문중 의원은 “의정부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삼정승인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국정을 논했던 행정부의 최고 기관인 의정부에서 따온 만큼 시민들의 자긍심이 대단하다”며 지명에 얽힌 내력을 설명했다.

“조선을 세운 태조는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왕위를 내려놓고 함흥으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함흥차사라는 말도 여기서 생겨나지요. 우여곡절 끝에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 태조는 의정부시 호원동 전좌(殿座)마을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때 조정의 삼정승을 비롯한 대신들이 태조를 뵈러 한양을 떠나 이곳에서 정무를 논하게 되니 지명을 의정부라 했답니다.”

의정부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이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야사가 어우러진 이름이라 하겠다.







태조 이성계 동상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병영의 추억’에서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의정부

의정부시는 병영의 추억이 깃든 곳이다. 뺨뺨머리로 가족과 헤어지며 눈시울을 붉혔던 306보충대. 그 자리는 2014년을 끝으로 신병들을 받지 않아 추억의 장소로 남아 있다. 306보충대가 ‘사나이 가는 길’에 만난 몸의 기억이라면 의정부 부대찌개는 추억의 맛이다. 부대찌개는 6·25전쟁 후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미군부대에서 나온 햄과 소시지 등으로 요리하면서 시작되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부대찌개 프랜차이즈까지 생겨날 정도로 국민먹거리가 되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주린 배를 채웠던 한 끼였다.

이랬던 의정부시가 지금은 경기 북부의 관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건립되면서 도(道)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홍문중 의원은 “그동안 미군과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어 지역 발전이 더뎠지만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국가안보에 희생되었던 6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만 평이 넘는 반환 부지에는 대학 캠퍼스를 비롯해 광역행정타운, 친환경 공원과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들

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거리인 만큼 첨단연구단지과 기업연구소 등이 옮겨올 예정입니다. 무조건 개발부터 하고 보는 난개발이 아니라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녹색자산을 활용해 친환경 행복도시로 꾸미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GTX-C노선이 완공되면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74분에서 16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학의 선구자 서계 박세당 고택과 유서 깊은 사찰

의정부시에는 유서 깊은 유적과 사찰이 많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학문의 길’을 간 서계(西溪) 박세당(1629~1703년) 선생의 고택과 묘역, 그리고 아들 박태보 선생의 충절과 덕행을 기리는 노강서원(鰲江書院) 등이 있다. 홍문중 의원과 함께 박세당 고택으로 향했다.

“박세당 선생은 장원급제로 벼슬길에 올랐지만 학문적 신념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곳 사랑채에서 저술한 ‘색경(穡經)’은 뛰어난 농사 관련 저술로 실사구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치적이자 사상을 담은 저서 ‘사변록(思辨錄)’은 그 당시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주자



학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결국 ‘사문난적(斯文亂賊, 못된 글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적)’으로 몰려 유배되는 등 고초를 겪게 됩니다.”

고택에서 바라보는 도봉산 삼봉(자운봉·만장봉·선인봉)과 앞마당에 서 있는 400년이 넘는 은행나무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선생의 품모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유명 사찰도 많아 신라시대에 창건했다는 도봉산의 망월사와 회룡사, 고산동 미륵암, 수락산 석림사 등 전통사찰에는 수많은 전설이 전해진다. 특히 회룡사는 함흥으로 떠난 이성계가 돌아와 ‘회룡’이라 했다는 얘기와 함께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 피신했던 암자인 석굴암이 있어 찾는 이가 많다.

교육정책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데 모아져야

홍문중 의원의 부친은 제11, 12대국회의원을 지냈고 경민학원을 설립한 홍우준 전 의원이다. 홍문중 의원은 자신이 첫 등원하던 날 부친께서 “귀는 열되 입은 닫아라,

많이 보고 기억에 담되 잘못된 정치를 닮지는 마라”고 당부하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홍문중 의원은 독립문을 본뜬 경민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과 함께했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위대한 미래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며 격려한 뒤 요즘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인터뷰를 마치며 홍문중 의원은 “올해는 교육과 정치를 바꾸는데 작은 밑알이 되겠다”고 새해 다짐을 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정권에 휘둘러서는 안 되고 중립성과 균형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정치가 위안을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홍 의원은 “새해에는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예술의 영역’이 되도록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 의정부 / 글. 김종해 사진. 김지범



경민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홍문중 의원



유동수 의원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평택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동행’

지난달 국회보 ‘칭찬합시다’ 주인공이었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호 주인공으로 유의동 의원을 꼽았다. 유동수 의원은 유의동 의원에 대해 “경험이 많고 합리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갖고 계신다. 현안의 핵심 쟁점과 방향을 잘 정리한 뒤 해법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것을 쉽고 부드럽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줄 아는 분”이라고 칭찬했다. 유의동 의원은 “(유동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셔서 서로 협의할 일이 많았다. 후하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등을 맡아 최근 여야 협상의 중재자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바른미래당 의원으로서 국가가 잘 운영되는데 윤희유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적으로 팽창하는 도시 평택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뛰다

당직을 맡아 국회에서 바쁜 나날 속에서도 유의동 의원은 짬짬이 지역구인 평택을 찾고 있다.

“평택은 동북아허브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입니다. 반도체 공장 같은 산업단지, 항만, 농촌, 군사시설





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등 평택에 유치된 기업 생산라인이 양산을 시작하며 일자리뿐 아니라 지방세수와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평택이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만큼 질적인 성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데, 그 가교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택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숲 조성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에서 부지런히 관련 세미나도 열었다. 평택 시민들이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로부터 예산 배정도 받았다. 평택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았다. 유 의원은 “올해는 ‘평화예술의전당’(가

칭) 착공이 이뤄지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국비 확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유의동 의원은 스스로를 ‘개혁적 보수’라고 말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면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시대의 변화와 흐름, 방향성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지요. 개혁을 위해서는 자유로워야 하되, 언제나 현실에 발을 디뎌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개혁을 통해 변화를 꿈꾸되 책임감 있는 변화를 만드는 개혁적 보수이고 싶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진보든 보수든 가야 할 길은 같다”며 “결국 국리민복(國利民福), 국태민안(國泰民安) 실현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의원으로서 진보를 자임하는 정당에는 뒤떨어진 현실감각을 지적하고, 보수를 자임하는 정당에는 진정한 보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김명연 의원을 칭찬합니다

유의동 의원은 다음 칭찬 주자로 김명연(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의원을 꼽았다. 그는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 같은 당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했다. 2015년 이후부터 원내대표단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두 의원은 서울 영등포의 한 허름한 생태찌개 식당에 자주 모인다고 해서 이름 붙인 ‘생태계’ 모임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고 한다.

“(김명연 의원은) 7년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실 정도로 보건복지 분야에 정통한 분이십니다.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낮은 자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온 분이시고 의원이 된 후에도 줄곧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복지에 힘을 쏟고 계시지요. 그 같은 헌신이 ‘보수의 험지’라 불리는 지역에서 두 번의 당선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분의 진정성, 열정, 전문성, 식견을 존경합니다.”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1948년 경북 구미 출생으로 영남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중앙시조대상 신인상, 이호우 시조 문학상, 유심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는 첫 시집 '낙화암'을 비롯해 '산성리에서', '처용 형님과 더불어', '영원을 꿈꾸다' 등이 있다.



시의 길이 나의 길



홍의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

제20대국회 총선을 세 달여 앞둔 2016년 1월 말, 조동화 시인을 만나러 경주로 향했다. 그의 시 ‘나 하나 꽃 피어’의 선거현수막 게재 허락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나 하나 꽃 피어’는 1995년경 발행한 ‘처용형님과 더불어’라는 시인의 세 번째 시집에 수록된 시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랑과 관심이 확산됐고 지금까지도 다수의 정치인, 경제인 등은 물론 회사원, 초등학교까지 인용, 암송하면서 대중적 사랑을 받는 명시라 할 수 있다.

나 역시 오래전부터 시가 담고 있는 ‘스스로 먼저 행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끈다’라는 의미에 동감했고, ‘숙명’과 같은 시로 늘 아끼던 터라, 시인을 직접 만나러 가는 길이 옛사랑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처럼 설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날 조동화 시인은 “하나하나 모여서 달라지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시다. 3시간 만에 완성된 시로 발표 후에 뜻밖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 선택했다. 선거원 몇 명 몫을 할 것이다. 정치인이 시를 안다는 것은 매우 멋스러운 일이다. 척박한 대구 땅에서 한 송이 꽃이 되길 바란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그렇게 그의 시는 나의 선거사무실 외벽 대형 현수막에 실렸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보통 선거를 치르게 되면 외벽 현수막에 지역 유권자들을 향한 공약 또는 학력이나 이력을 쓰지만 난 이런 흔한 것로부터 탈피하고 싶었다. 유권자들에게 잠시나마 시한 구절을 통해 고단한 삶에 쉼을 제공하고 싶었고, 당시 ‘힘지’인 대구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인 홍의락’의 의지와 각오, 희망과 염원을 피력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나는 대구에서 재선을 했다. 아직 온전한 꽃밭은 아니지만, 풀밭은 달라지고 있다. 균형과 도약의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지난 7년간 ‘풀밭’ 대구를 변화와 경쟁이 공존하는 ‘꽃밭’으로 만들기 위해 ‘힘들게 피는 꽃’임을 자임해왔다. 시를 떠올릴 때마다 꽃밭을 위한 노력과 경주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늘 하곤 한다.

이 글을 빌려 시의 사용을 허락해주신 시인 조동화 선생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고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전남 여수 거문도에서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난 김성환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입성에 성공했다. 1995년 노원구위원을 시작으로 서울시의원과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거친 그는 2010년부터 8년 동안 노원구청장을 지내면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다져왔다. 김성환 의원을 국회보가 만났다.

어린 시절 실컷 뛰놀며 컸다는 김성환 의원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른 형제들과 할머니와 함께 서울로 유학을 왔다.

“전학을 와서도 방학이 시작되는 날 고향으로 내려가 원 없이 놀다 개학하는 날 새벽에 서울로 왔습니다. 덕분에 방학 끝에 보는 첫 시험은 늘 형편없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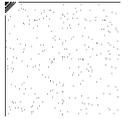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며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그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연세대 법학과에 입학해 1학년 때는 고시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교내에 늘 진을 치고 있는 백골단과 그들에게 끌려가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다.

“대학에 가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학생운동을 하는 선배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사법부를 보며 권력의 시녀로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지요.”

자살예방사업과 ‘노원 에너지 제로 하우스’

김성환 의원은 졸업 후 신계륜 전 의원의 비서관으로





1992년 국회와 첫 인연을 맺었다.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언젠가는 정치를 해보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5년 지방자치 부활을 계기로 구의원에 도전하면서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노원구청장에 당선된 그는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처음 구청장 업무를 시작할 당시 2009년 기준으로 노원구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9.3명이었습니다. 자살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접근하다보니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 생명은 우주와 같으니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경찰서, 소방서, 대학병원 등 관계기관들과 MOU를 체결했다. 또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전환하고 이웃사랑봉사단도 만들어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유가족, 우울증 치료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적 지원에 집중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노원구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으로 21.4명까지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최초의 친환경에너지 자립단지인 ‘노원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준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2014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유럽 연수를 갔다가 ‘세계의 환경수도’라 불리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하게 됐고, 그때 노원구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1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공모사업에 노원구가 선정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노원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완공하게 됐습니다.”

121세대 규모의 ‘노원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신혼부부 위주의 행복주택으로, 냉난방과 온수, 조명, 환기 등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열과 재생에너지로 생활하는 단지

다. 김성환 의원은 국내 GDP의 10%를 차지하는 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제로주택과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추진된다면 지구도 살리면서 건축분야의 기술혁신과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의 한 명이 될 것

자살예방사업과 에너지 제로 하우스 등을 통해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정치인’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은 ‘애구심(愛球心)’에 대해 소개하며 스스로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의 한 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애구심이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지구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다양한 생명종들과 함께 살아오고 있는 공동의 공간입니다. 그런 지구가 산업혁명 이후 수백 년 동안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류가 공통 다음으로 멸종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애구심입니다.”

김성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추구하는 의정활동의 방향 역시 ‘지구를 지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 등 다른 곳에서 배출되는 것을 합하면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8억 톤, 세계적으로는 33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매년 뿔어져 나옵니다. 이게 지구 온도를 높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걸 막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산업부의 영향이 큰데 산업부는 여전히 원전과 석탄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 그 방향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 일을 함으로써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며칠이 멀다 하고 이어지는 미세먼지의 공습을 겪으며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의 한 명이 되겠다”는 김성환 의원의 다짐이 새삼스레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

철도사고, 온라인 로스쿨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안호영·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은 1월 10일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복되는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재 분리된 ‘철도 운송사업’과 ‘기반시설’ 부문을 통합(상하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철 철도노조위원장은 “철도는 선로, 차량, 인력 등 다양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작동하는 네트워크 산업으로 기술적, 경영상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도 상하통합은 철도 운영과 기반시설 운영 업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철도는 한국철도공사(운송사업 부문)와 한국철도시설공단(기반시설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두 회사가 분리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도 나뉘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릉선 탈선 사고 당시 논란이 된 여객승무원의 소극적 대응이 안전업무에서 배제된 승무원의 고용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위원장은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은 안전업무를 담당하지 못한다”면서 “KTX 열차 길이가 380m가량 되는데 한국철도공사 소속 열차탐장이 모든 열차 안전업무를 담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용섭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위원회 준비위원은 사고를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는 철도사고 대응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철도공사가 안전운행이 아닌 정시운행,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 생명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에 두는 문화를 만들었다”면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면 진짜 문제는 못 보게 된다”고 말했다.



‘넥슨 매각 사태: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

국회 콘텐츠미래융합포럼(공동대표 신경민·김병관·김세연·김경진 의원)은 1월 14일 국회에서 ‘넥슨 매각 사태: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의 매각설 추진 배경을 짚어보고, 한국 게임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열렸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게임업체가 고용·수익을 상당히 창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영화인은 있어도 존경받는 게임인은 없다”며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블록체인 등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규제 철폐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넥슨 매각을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한국게임학회)는 “일부 지분은 넷마블 등 국내 기업에, 일부 기업은 디즈니 등 해외 콘텐츠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넥슨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에도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수 명지대 교수는 “텐센트나 넷이즈 같은 중국 업체는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만한 투자를 진행할 상황이 안 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는 당장 넥슨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정현 교수는 “정부는 섣달문제를 비롯해 게임을 마약과 동류로 보는 질병코드 도입 등을 폐기하고 게임 규제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업계에서는 공격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혁신적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토론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과 공동으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오는 2월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으로 대한항공 지분 10.5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1대 주주는 지주회사 한진칼(지분율 29.96%)이지만, 조 회장 등 특

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쳐도 33.34%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조양호 대한항공·한진칼 이사의 3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건과 땅콩 회항, 물컵갑질 등 총수 일가의 부적절한 행동이 대한항공 이미지를 실추시켜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연기금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면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양호 이사는 물론 이를 견제하지 못한 이사들의 재선임에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국민연금이 대기업 지분을 사들여 사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회 이익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도 참석했다. 박 전 사무장은 “저는 2014년 12월 5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간 가치가 훼손되는 극악한 일을 겪었고, 매일 회사로 출근할 때마다 (회사에서 해고될지 모른다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다”며 “이것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공정함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17일 국회에서 한국방송통신대와 공동으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싼 등록금과 빠듯한 교육과정으로 일반 직장인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 등으로 법학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고비용, 낮은 접근성 등 현행 로스쿨 제도의 단점을 지적하며 시간제·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 교수는 “로스쿨 고비용의 발생원인은 로스쿨이 전일제의 학업 수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이 다른 직업의 기회를 갖지 못해 경제적 이유로 다른 직업에 종사해야 하거나 돌봄 노동에 전념해야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또 미국 야간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들어 “시간제 로스쿨은 로스쿨로의



접근성을 확장해 법률가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인적 속성을 가진 학생들이 손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온라인 로스쿨은 다양한 사회적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로스쿨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로스쿨은 저렴한 학비로 많은 사람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며 “직장인 등이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면서 법학전문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일종의 ‘대안 로스쿨’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온라인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온라인 로스쿨은 입학전형 요소를 간소화하고, 법률가로서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법학학점 12학점을 이수한 사람을 기본 입학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 평화 실현을 위한 민관 정책 토론회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 서해5도 어민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1월 28일 국회에서 ‘서해 평화 실현을 위한 민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현근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서해 평화를 위한 단기 과제로 연평어장 좌측과 소청도 남방 어장을 직선으로 연결해 조업구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한바다 어장’을 만들어 조업권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해5도 어민들은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역이 정해진 어장에서만 조업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또 서해5도행 여객선의 야간운항을 허용하고 인천~연평도 여객선도 늘려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내항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원 서해5도 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서해 평화를 실현하려면 정부와 지역 주민간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태현 서해5도 어민연합회 준비위원장은 “서해5도와 황해도는 다시마·미역 양식 등 해양바이오 산업을 키울 최적지”라며 “남북 공동연구로 서해5도를 해양바이오의 메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7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TA를 통한 해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 최근 5년 동안 연간 3천500만 원 전후에 머물고 있는 농가소득의 정체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 고품질 안전 농산물 선호도 증가에 따른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미래 성장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해 차별화된 지역특화작목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작목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전략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체계적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 기반 구축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농산업체



영체의 연구시설 노후화, 시설운영 및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 관련 예산 부족 등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정적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논했다. 또 기존 중앙 중심의 포괄적 지원 및 연구기관 중심의 육성체계가 아닌 농촌 현장의 다양한 기술개발 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육성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처리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특화작목을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중장기 목표, 재원의 확보방안, 인력의 양성, 성과의 확산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포괄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어 지역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셋째, 시·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 제정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게 해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했고, 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거점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계

획을 담도록 해 지역별 자생적 농업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기반 조성·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에 시설·장비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구축하고자 했고,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대학과 공동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기술력 향상을 도모했다.

다섯째, 현재 지역특화작목 관련 R&D 지원이 생산 중심에 국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확 후 관리기술, 유통·가공기술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별 맞춤형 R&D 지원이 가능하게 했고, 아울러 해외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용 품목개발 등의 사업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작목협회를 설립해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다양한 기술 수요를 수렴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시해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는 등 정부와 농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 및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지역주도형 연구개발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 및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지역특화작목산업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눈에 보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법률’ 발간

최근 법률의 제·개정이 빈번해짐에 따라 전체 법률의 수가 증가하고 법률 상호간 관계도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천400여 개 이상의 현행 법률 가운데 어떠한 법률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지 알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개별 법률



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수의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입법 환경 속에서 법률간 모순과 저촉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 노력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법제실은 법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우리나라 전체 법률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고 관련 주제별로 정리하여 ‘한눈에 보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법률’로 발간했다. 국회 차원에서 전체 법률에 대한 안내 지도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전체 1천448개(2018. 11. 30. 기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포함) 법률을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나누고 분야-부문-주제 순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17개의 상임위원회별로 첫 페이지에 법률의 분류와 체계를 도식화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도를 작성했다. 상임위원회 전체 법률을 유사 주제별로 묶어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별 법률의 유형, 개정안 발의 건수, 최초 시행연도 등의 정보를 제공해 법률의 기본적 성격과 관심도, 연혁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법률의 유형을 기본법, 특별법, 조직법, 규제법, 진흥법, 한시법 등으로 구분해 표시함으로써 개별 법률의 기본적인 성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 성질이 유사한 유



이용준 법제실장



형의 법률들을 비교해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제20대국회에서 개정안이 많이 발의되었던 주요 법률을 부록으로 다시 정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법률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의료법’, ‘근로기준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있다. 이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사회적 이슈 등으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관심 있게 살펴 봐야 할 법률들을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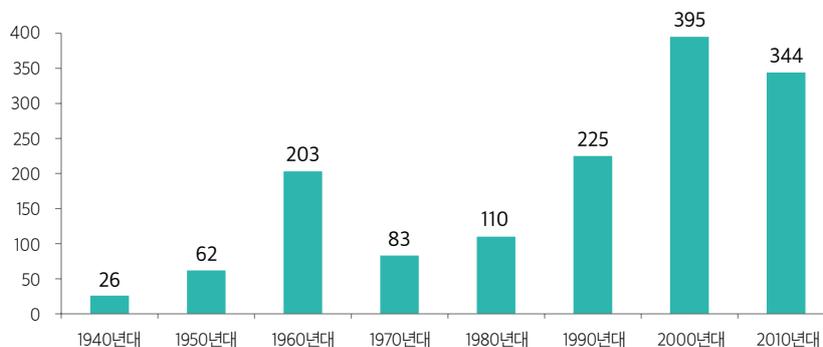
한편,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법률을 최초 시행연도 순서대로 정리해 시대 변화에 따른 입법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 결과 현행 법률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00년대 이후 제정되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의 주요 분야를 제정된 시대별로 보면 국가체제 정립기에는 ‘국회법’, ‘민법’과 같이 법치주의를 형성하고 국가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정치·행정 분야의 법률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7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

기에는 ‘국가채권 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외무역법’ 등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중점으로 한 법률이 많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가체제를 정립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후에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이 많이 제정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법률은 한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의 결과물이자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기에 시대에 따라 주요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일정한 경향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한눈에 보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법률’을 전체 법률의 구조와 분야별·유형별 법률체계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여러 각도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한다면 다양한 시사점과 함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 흐름이 갖는 의미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연대별 최초 시행법률



전환점 맞이한 중국의 공유자전거 정책



김형진 중국주재관

2015년 처음 등장한 공유자전거(共享单车)는 전자상거래(网上购物), 고속철(高铁), 즈푸바오(支付宝, 중국 그룹 알리바바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결제의 대표 격으로, 텐센트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웨이신과 함께 중국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와 함께 중국의 신 4대 발명품으로 중국 전역에서 중국인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개인이 스마트폰에서 해당 공유자전거 업체의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공유자전거 뒷면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원화로 160원이 조금 넘는 1위안(元)의 비용(초기 이용 시 공유자전거 업체에 따라 99위안~299위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으로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접근의 용이성 및 이용 편의성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보다 많은 현지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도입 초기 공유자전거 보급대수는 200만 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불과 2년여 사이 2천만 대(2017년 6월 기준)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자전거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교통운수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등록된 이용자수만 1억3천만 명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공유자전거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유자전거 기업의 선두 격이라 할 수 있는 오포(ofo)는 영국, 미국, 싱가포르, 호주,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17개국 180여 개 도시에 진출해 650만여 대 이상의 공유자전거를 운영하고 있고(오포의 경우 2017년 1월 부산광역시에 도 시범 도입되었으나, 지난해 말 10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음), 후발 경쟁 업체인 모바이크(Mobike) 역시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500만여 대 이상의 공유자전거를 운영 중에 있다.

폭발적인 성장세 보이는 공유자전거

이처럼 공유자전거가 중국에서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앞서 언급한 접근 용이성과 이용 편의성 이외에 중국 특유의 문화, 자전거 도



로 인프라 및 중국의 값싼 노동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한다. 기본적으로 중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전거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즐겨 사용해왔고, 중국 도시의 대부분 도로에는 차도, 인도 이외에 별도의 2~3미터 폭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도로 인프라가 공유자전거의 급속한 확산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수백만 대의 공유자전거를 매일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리·정비·관리 인력이 필수적인데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가 사업성 유지에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 공유자전거 시장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공룡기업인 오포와 모바이크가 각각 IT 대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사업 규모를 공격적으로 확대한 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급속한 성장 이면에 드러난 문제점

하지만 이러한 공유자전거의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인도, 차도 및 횡단보도 등에 구분 없이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면 어디에나 대량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더 이상 녹색 도로 혁명의 아이콘이 아닌 도시의 공해로 인식되고 있고, 너무 많은 후발업체들의 시장 진입에 따른 출혈 경쟁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공유자전거 업계 1위인 오포는 시장 과열에 따른 공유자전거의 과잉 공급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금융시장에서 파산설이 불거져나와 보증금 환불 대란을 겪은 적이 있고, 업계 2위인 모바이크의 상황도 영업 부진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음), 수익성 약화에 따른

잇단 파산(2017년 6월 지방 거점도시 충칭의 공유자전거 업체인 '우쿵'이 도산했고, 같은 해 10월 공유자전거 업계 3위인 '블루고고'가 파산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수십개의 업체가 줄도산하였음)으로 공유자전거 업체가 납부 받은 보증금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등 사회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베이징시 정부는 공유자전거의 무분별 확산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 통행 방해, 도시 미관 훼손 및 공유자전거 업체 파산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공유자전거 관련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북경시 규범적인 공유자전거 발전에 대한 격려와 지도의견(北京市鼓励规范发展共享自行车的指导意见)'이 그것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녹색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유자전거 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되 그 발전 규모는 시민들의 수요, 도시의 공간 수용능력 및 도로자원과 주차시설의 능력에 부합하도록 원칙을 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으로 주차구역 마련, 공유자전거에 위성 자동위치측정 장치 설치, 보증금 반환 보장을 위한 기업자금 전용계좌 개설, 사용자 실명제 실시, 시장 철수 전 기업의 공시·임차 보증금 반환·투입 자전거 회수 등의 완수 등을 규정했다.

공유경제의 총아로 도입 2~3년 만에 엄청난 성장세를 이룩한 중국의 공유자전거는 성장 이면의 다양한 폐해로 인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 당국도 전환의 시기에 공유자전거의 지속적인 발전은 추진하되 보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유자전거 도입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 안정적인 정책 정착에 보다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

철도안전, 인적과실 최소화해야

‘철도안전법’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83호, 2018.6.12., 일부개정)

지난해 철도사고는 열차사고 4건, 사상사고 78건, 건널목사고 8건, 시설파손사고 4건 등 95건이며, 운행 장애는 210건이었다. 운행장애는 차량 고장이 108건(51%)으로 가장 많은데, 부품 결함 및 정비사 정비소홀, 정비수칙 위반 등 주로 인적과실이 많았다. 강릉선 KTX 탈선사고는 시공불량·점검확인 소홀 등이 원인이었으며, 오송역 단전사고는 조기복구가 가능한 사고였으나 초기 상황판단 및 대응 부실로 장시간 운행이 지연된 경우였다.

철도에 안전투자공시제, 안전수준평가제를 도입하고 현장 관리자 및 철도경찰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등을 규정해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지난해 12월 13일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를 찾아 ‘철도안전법’ 개정의 내용과 과제 등을 알아봤다.

철도안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

최인호 의원, 박찬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2018년 5월 28일 본회의를 통과, 6월 12일 공포, 12월 13일 시행됐다.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공시하고,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철

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가 운행선로 인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경찰의 직무장비 사용근거도 마련했다.

김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철도안전법’ 시행에 대해 “철도안전을 위해 관련 제도들을 도입,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는데 법 개정을 통해 결실이 이뤄진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에 시행된 안전투자공시제도와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2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철도운영자 등과 수차례 협의 후 진행된 제도다. 작업책임자, 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과 철도경찰의 직무장비 사용규정 역시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인 요구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투자공시제는 철도기관들이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안전친화적인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제도다.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는 철도기관들의 안전에 대한 수준과 철도안전제도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기관들의 안전수준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철도현장작업책임자 등



KTX 열차가 철로를 달리고 있다.

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이형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사무관은 “기존 법령에서는 작업책임자와 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각 철도운영기관들이 준수사항들을 사규로 정해왔는데 철도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제도의 통일적 시행을 위해 이번에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 지휘,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다.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 당일 작업에 대한 교육 시행과 안전장비 착용 점검, 열차운행의 안전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및 운행 일정을 작업책임자와 협의, 통보하고 작업시간 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또 그동안 철도경찰의 직무장비 사용근거는 보안검색 분야에 한정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열차·역사 내 난동, 강력범죄 등 치안업무 분야에 직무장비 사용이 어려웠는데,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철도경찰이 현행법

체포, 시설 및 차량 내 난동 발생시 철도 직무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철도 이용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사무관은 “안전투자공시제도와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의 시행 후 철도운영자들과 협의해 운영상 미흡한 점을 점차 보완할 계획이다. 또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3일 시행되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도입, 철도차량 부품 공급 의무화, 철도차량의 이력 관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관련한 부분들은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철도운영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적극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안하고 안전한 철도 만들기 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사고·장애가 시공불량, 작업 기본 원칙 미준수, 차량 정비소홀 등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했다고 분석,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 중심으로 마련했다. 건설·유지관리 이원화로 인한 불안전요인 해소를 위해 철도공단·공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공단·공사 합동으로 ‘(가칭)철도시설 합동관리단’을 설치, 시공단계부터 안전문제 공동 확인, 현안쟁점을 총괄 조정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최근 철도사고가 다수 발생해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철도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제도들의 연착륙을 위해 도입 초기에 나타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앞으로 제도의 기반을 잘 다져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철도 사고 제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2018년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2018년 12월 7일 본회의 의결





도로교통법 강화된 거 알지? 앞으로 사회 나가면 음주운전 절대 안 돼요!
이게 내가 자네들한테 해주는 마지막 수업이야.

(2019 도로교통법)

음주사망사고		음주치상사고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재취득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500만 원 ~3천만 원 벌금	현행	0.05%~0.1% (소주2잔)	현행	0.10% 이상 (소주7잔)	현행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시 3년 제한
개정	3년 이상 유기징역	개정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3천만 원 벌금	개정	0.03%~0.08% (소주1잔)	개정	0.08% 이상 (소주4잔)	개정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시 3년 제한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국회, 대학병원 교수 피살사건과 KT 통신구 화재 등 논의

보건복지위,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의료진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했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를 하던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현장 폭행사고를 장소별·병원 규모별·진료 과목별로 발생 원인과 경중도를 가려낼 것”이라며 “정신질환 응급 의료체계를 다듬고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행사고에 대한 심층 조사를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인 폭행 실태를 파악해 실제 현장에서 환자의 우발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구분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소 진료도 미진했고, 지역 사회의 건강복지센터 상주 인력도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뒤 범부처 협의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보건 관련 예산 10조 원 가량 가운데 정신보건 예산은 1천563억 원으로 1.5%에 불과하다. 2011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5%였다”고 말했다.

김명연 위원(자유한국당)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필수 의료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치매 센터 등을 의욕적으로 갖춰놓고도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안)’을 보고했다. 보



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의사와 병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부추기는 콘텐츠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병원 내 불법행위 방지, 위험 물건 소지 금지 등도 강조하기로 했으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등 인식 개선 문구를 대중매체로 전파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힘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KT 통신구 화재’ 질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 황창규 KT 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을 질타했다. 여야 위원들은 ‘통신 재난’ 수준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역시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사고로 피해를 본 일반 가입자는 물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수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 방송이 보도한 KT의 통신구 케이블 관리상황을 언급하며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로 차 있고 정화조가 연결돼 분뇨도 포함돼 있다”면서 “물을 양수기로 퍼내야 하는데 이 일을 하청업체에 맡겨 놓고 있다.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최연혜 위원(자유한국당)은 “과기부가 제출한 향후 대응방안을 읽어봤는데 땀질 방안이었다. 합동 대처방안이라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T가 현재 추진하는 피해보상 방침도 비판을 받았다. 앞서 KT는 당시 화재로 인한 피해 상인들에게 이달 중순부터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피해 상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상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KT는 계속 위로금, 보상금을 말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배상금이 맞는 표현”이라며 “손액을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로금도 줘야 한다” 주장했다. 김경진 위원(민주평화당)도 “영업자들의 매출, 소득 자료는 국세청 전산으로도 잡힌다”며 “매출액을 산정해 기계적으로 배상해주면 된다”고 했다.

노웅래 위원장이 “KT가 불법으로 관리등급을 조작한 데 따른 인재(人災)였던 만큼 KT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하자, 황창규 회장은 “보상협의체가 구성됐으니 이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소상공인 매출액 등과 관련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가 있으니 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데이터를 오픈해서 보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삼성전자 평택공장 찾아 “차세대반도체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월 17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아 반도체 업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의 추격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확산함에 따라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시찰에는 홍일표 위원장을 비롯해 백재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김기선·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조배숙 위원(민주평화당) 등이, 삼성전자에서는 진교영 사장, 강봉용 부사장 등이 함께했다.

홍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과 중국 정부의 반도체 집중 육성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시스템반도체, 5G 네트워크 사업,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리특별위,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완료

윤리특별위원회는 1월 23일 그동안 공석이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의원징계안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필요적 자문기구인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지난 18일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위촉을 요청했다”며 “그동안 8명으로 구성되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로 4명이 공석이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몫 3인, 바른미래당 몫 1인이 국회의장의 위촉을 받아 임기를 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간사위원들과 회동을 갖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 처리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2월 7일 만나 징계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삶이 힘든가요
많이 지쳤나요

080-788-0479

국회생명사다리

24시간 전화상담센터



지금 전화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해 주세요

힘이 되어 드릴게요

NEWS

2019 FEBRUARY

문희상 국회의장,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 전달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9일 국회 본관 3식당 별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서’가 꽉 막힌 국회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각 당은 의견서에 대한 찬반을 떠나 각 당의 입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어 “특히 여기 계신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안을 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은 한국 정치의 중대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역사의 죄인’이 아닌 ‘역사 그 자체’로 기억돼야 한다”며 “정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6개월 연장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선거제도 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국회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외 15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출범한 후 8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의견서’를 정개특위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의견서에서 “선거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제안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선 “현재 만 19세로 되어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한이란대사 접견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16일 의장 집무실에서 사이드 바담 치 사베스타리 신임 주한이란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이란은 1973년 오일 쇼크시 중동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원유를 공급한 국가” 라면서 “우리는 이란-이라크 전쟁(1988)시 공습으로 대림 건설 직원들이 사망했지만, 끝까지 남아 공사를 완료한 적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바담치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양국 의회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바담치 샤베스타리 대사는 “양국 관계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우호관계”라면서 “유감스럽게도 현재 양국 간 경제교류와 교역이 계속 중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양국간 협력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바담치 샤베스타리 대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HD급 고화질 서비스 시작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월 9일부터 인터넷의사중계의 화질을 고화질인 HD(High Definition)급으로 개선했다.

이전의 저화질 인터넷의사중계 서비스는 화면 확대 시 본회의 전자투표 결과 및 위원회 회의 시청각 화면의 내용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HD급(1280×720) 고화질 영상은 기존 영상보다 화질이 9배 증가해 이용자가 체감하는 영상의 품질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9월부터 청각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막서비스, 회의 시작 후 10분 이내에 제공되는 빠른 다시보기 등의 개선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인사

정운경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충북대 건축공학과, 중앙대 법학과 석사, 중앙대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공채(7급),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예산결산 특별위 입법조사관, 교육문화체육 위 심의관, 특별위·정무위 전문위원,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최상진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법학 석사
- 법제실 법제관, 회계과 지출담당, 환경노동위·예산결산특별위 입법조사관, 국제국 일본주재관, 아시아태평양과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심의관, 관리국장

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 국민 서비스 개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019년 1월 1일부터 '외국법률번역DB'를 국회전자도서관과 국회법률도서관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했다.

'외국법률번역DB'는 2006년부터 정책 및 입법 관련 외국법률을 국회도서관이 자체 번역하거나 타 공공기관이 번역한 법률을 수집해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법률번역 데이터베이스다. 지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일본, 중국,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104개국 1만244건의

외국법률 번역문이 구축돼 있다.

국회도서관은 정보자원의 공개·공유 기조 아래 기존에 국회 내부와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해오던 ‘외국법률번역DB’를 법조계, 학계 등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부터 각 열람실 내에 개인도서 반입과 이용도 허용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입법 지원 기능뿐 아니라 국가중심도서관으로서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외국법률번역DB’의 국민 서비스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가자원을 공개해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글로벌 법제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정책처,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을 발간했다. 장기 재정전망은 장래의 국가재정 건전성을 미리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확정예산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32년(2019~2050년)간 재정총량의 변화를 전망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총수입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총지출은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총수입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고 2050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85.6%에 이를 전망이다.

입법조사처, ‘방송법제 개편과 OTT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법제 개편과 OTT정책 방향 세미나: 통합방송법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대표의원 김성수),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전규찬)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규찬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최세경 박사(중소기업연구원)가 ‘OTT 및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조항의 개요와 입법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고민수 교수(원주대학교),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김여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창희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동철 국장(방송통신위원회), 손지원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의 ‘방송법’ 편입과 관련하여 규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찬반논의가 있었다.



두시영 작, '임시정부의 환국', 국회의사처 소장, 239cm × 193.8cm

임시정부의 환국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시작됩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천명한 헌법의 첫 구절에 새긴 3·1운동은 대한민국임시의정원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모태가 됩니다. 국회가 소장하고 있는 두시영 화백의 작품인 ‘임시정부의 환국’은 1945년 11월 3일, 중국 충칭에서 환국을 앞두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기념촬영을 한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신익희, 조소앙, 이시영, 홍진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국땅에서 오매불망 바랐던 광복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글. 김종해 사진. 유윤기

‘임시의정원법’을 기초한 신익희·손정도·조소앙·이광수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먼저 설립되었지만, 조직과 체제는 나중에 갖추었다. 설립 당시에는 의장·부의장·서기만 선출한 상태였다. 제1회 회의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의정원을 조직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하자고 했고, 신익희(申翼熙)·손정도(孫貞道)·조소앙(趙素昂)·이광수(李光洙)를 기초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이 의정원법을 기초하는 임무를 맡았다.

조소앙과 신익희는 일본에 유학해 법률을 전공한 전문가였다. 조소앙은 1904년 황실특과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에 유학했고, 1912년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한 인물이다. 신익희도 1917년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인물로, 귀국 후 보성법률상업학교에서 헌법과 국제공법 등을 강의했다. 손정도는 협성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고, 이광수는 와세다대학 철학과 출신으로 소설가로서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다. 조소앙과 신익희는 법안을 작성하고, 손정도와 이광수는 문안을 검토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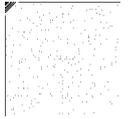
조소앙·신익희·손정도·이광수에 의해 의정원법 기초안이 작성되었다. 의정원법 기초안은 1919년 4월 25일 열린 제3회 회의에서 다루어졌다. 제3회 회의는 의정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최한 회의였다.

회의에 의정원법 기초안이 상정되었다. 기초안은 심사위원 남형우(南亨祐)·이춘숙(李春塾)·서병호(徐丙浩)·홍도(洪濤)·이광(李光) 등 5명의 심사를 거쳤다. 회의에서는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켰다. 이로써 의정원법이 마련되었다.

제정된 의정원법에 의해 의정원이 조직되었다. 의정원법은 의정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13장 5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의정원은 각 지방 인민의 대표의원으로 조직함”(제1조)이라고 했다. 의정원은 의원들로 조직한다는 것이다. 의원은 각 지방 국민의 대표였다. 국민의 대표들로 의정원을 조직한 것이다.

의원을 선출하는 데는 자격과 기준이 있었다. 자격은 ‘대한국민으로 중등교육을 수(受)한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했다. 23세 이상이면 여성도 의원이 될 수 있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김마리아·방순희(方順熙) 등 여성들이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선출 기준은 각 도 단위로 인구 30만 명에 1명씩 선출하도록 했다. 경기·충청·경상·전라·함경·평안의 각도에서는 6명씩, 황해도와 강원도에서는 3명씩, 중국·러시아·미주지역에서 각 3명씩 선출해, 의원의 수는 모두 51명이었다. 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고, 매년 3분의 1을 개선한다고 했다.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의원의 선거는 국



내의 각도 선거구에서 실시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직접선거를 실시할 수 없었다. 임시적인 방법으로 임시정부 소재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그 출신지역에 따라 선거했다. 선거는 4월 30일까지 마쳤다. 그 결과 경기도 4명, 경상도 5명, 충청도 4명, 전라도 3명, 강원도 3명, 함경도 5명, 평안도 6명, 황해도 3명, 중국지역 2명 등 모두 35명이 선출되었다.

선출된 의원들이 참석해 회의를 열었다. 제4회 회의였다. 의정원이 각 지방대표들로 구성되어 운영된 것은 제4회부터라고 하겠다. 회의는 4월 30일에 시작하여 5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회의 첫날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뽑았다. 의장에 손정도, 부의장에 신규식(申圭植)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의정원은 새롭게 조직되었고, 체제도 갖추었다. 조직은 의장·부의장과 더불어, 비서국이란 기구가 있었다. 비서국은 비서 및 의정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비서장 1인·비서 2인·서기 3인으로 구성되었고, 산하에 의사과와 서무과를 두었다.

위원회도 설치했다. 위원회는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가 있었다. 전원위원회는 의원 전원이 참여해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각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을 다시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구성

되어 소관부처의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로, 모두 8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제1과(법제), 제2과(내무·외무), 제3과(재무), 제4과(군무), 제5과(교통), 제6과(예산·결산), 제7과(청원·징계), 제8과(교육·실업)였고, 각 분과에 5명의 의원을 둔다고 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의원자격심사위원회·국제연맹제출안건작성위원회 등이 그에 해당된다.

의정원의 주요 역할은 입법이었다. 1919년 9월 개정된 헌법에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제5조)이라고 해, 의정원의 역할이 입법기구임을 명시해놓았다. 의정원은 임시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한 것을 비롯해,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법’, 1925년 4월 7일 ‘대한민국임시헌법’, 1927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약헌’,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임시약헌’,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임시헌장’ 등 5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했다.

의정원의 직권행사는 행정부가 집행하는 국정 전반에 걸쳐 있었다. 헌법의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해 일체 법률안의 심의 의결, 대통령의 선거, 정부의 예산 및 결산 의결,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 국무원 및 주외대사 등에 대한 임명동의권, 선전 및 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인민청원 수리, 국무원의



신익희



손정도



조소앙

출석 답변 요구, 대통령과 국무원의 탄핵, 관리의 위법행위 조사 등이었다.

의원에 대한 징계권도 있었고, 경위도 두었다. 의원 징계는 발언정지·출석정지·사죄·제명 등 네 가지였다. 발언정지는 결석이 3일인 경우, 출석정지는 발언정지가 2회 이상인 경우, 제명은 출석정지가 2회 이상이거나 회의장에 흥기를 가지고 출석한 경우 등이다. 회의장의 질서를 위해 경위를 두었다. 경위는 3명이었고, 의장이 경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의원들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방청인들이 회의를 방해할 경우, 의장의 명령으로 경위가 이들을 퇴출시키도록 했다.

의정원의 활동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의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의회를 통해 이뤄졌다. 정기의회는 처음에는 매년 4월에 개최하다가 1925년부터 10월에 개최했다. 임시의회는 임시정부의 요구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열렸다. 1919년 4월 11일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1947년 3월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개최했다.

의정원법은 이후 두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세 곳의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루어 통합정부를 구성했을 때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1919년 9월 17일 ‘개정임시의정원법’으로 공포되었다. 1942년 좌익세력이 의정원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또다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에 따라 의원의 숫자가 57명으로 늘어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조직과 체제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의정원은 의정원법에 의해 운영되었고, 의정원법은 현재의 국회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글·사진. 한시준 교수(단국대 사학과 동양학연구원장)



같은 소리, 다른 표기

한글은 사람의 말소리를 그대로 적기에 최적화된 문자이다. 소리와 문자가 거의 일대일로 대응하므로 한글이야말로 사람의 말소리를 적기에 가장 알맞은 문자임에 틀림없다. 한글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문자 중에 가장 뛰어난 문자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의 모음 중 몇 개는 분명히 다른 소리인데 발음을 할 때나 들을 때 같은 소리처럼 인식되는 것들이 있다. ‘에’와 ‘애’, ‘외’와 ‘왜’, ‘왜’와 ‘웨’는 엄밀히 말해 발음이 다르지만 매우 비슷하게 들린다. 이러한 이유로 ‘김치찌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찌게’라고 적어야 할지 ‘찌개’라고 적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이러한 낱말이 적지 않다. 모음 ‘에’와 ‘애’가 사용된 예들을 보자.

‘에’ (o) / ‘애’ (x)	‘애’ (o) / ‘에’ (x)
지게, 집게, 족집게, 게거품, 돌멩이, 삼베, 금세, 껍데기, 메기탕, 쓰레기, 수제비, 멧돼지, 메뚜기, 메우다, 베끼다, (손을) 베다, (가방을) 메다	이쑤시개, 덮개, 지우개, 가리개, 베개, 부침개, 찌개, 육개장, 코흘리개, 오줌싸개, 멧돌, 요컨대, 예컨대, 매기다, (냄새가) 배다, (허리띠를) 매다

특히 위의 예들 중 ‘배다’와 ‘매다’, ‘메다’와 ‘매다’는 잘 구분해서 쓰지 않으면 의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모음 ‘외’와 ‘왜’는 어떨까? ‘뵈다’와 ‘뵈다’에는 ‘외’를 쓰고 ‘뵈다’와 ‘뵈다’에는 ‘왜’를 쓴다. ‘뵈’는 ‘뵈어’가 줄어서 된 말이고, ‘뵈’는 ‘뵈어’가 줄어서 된 말이다. 그러므로 어미 ‘어’나 선어말어미 ‘었’이 사용된 문맥에는

‘외’가 아니라 ‘왜’를 쓰면 된다.

• 내일 뵈러(o) / 뵈러(x) 가겠습니다. • 직접 뵈고(o) / 뵈고(x)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생님, 내일 뵈게요(o) / 뵈게요(x)	• 안 되면(o) / 되면(x) 되게(o) / 되게(x) 하라. • 안 되(x) / 안 돼(o). • 안 뵈다(x) / 안 뵈다(o).
--	---

문법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면, ‘하’와 ‘해’를 그 자리에 넣어보면 된다. ‘하’가 어울리면 ‘뵈’와 ‘뵈’를 쓰고, ‘해’가 어울리면 ‘뵈’와 ‘뵈’를 쓰는 것이다. ‘할게요’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들은 ‘뵈게요’와 ‘뵈게요’로 쓰면 되고, ‘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들은 ‘뵈다’와 ‘뵈다’로 쓰면 된다.

‘왜’와 ‘웨’도 마찬가지다. 소리가 매우 비슷하다. 이와 관련된 예를 보자.

• 웬지(o) / 웬지(x) 조바심이 난다. • 이게 웬(x) / 웬(o) 말이나? • 일찍 일어나다니, 오늘 웬일(x) / 웬일(o)이야?
--

‘웬지’는 이유를 나타내는 ‘왜인지’의 줄임말이고, ‘웬말’과 ‘웬일’의 ‘웬’은 ‘어찌 된, 어떠한’에서 온 말로 이해하면 된다. ‘웬만하다, 웬걸, 웬만큼’도 ‘왜’가 아닌 ‘웨’를 쓴다.

이처럼 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모음 표기를 두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예들을 잘 구분해 사용할 것 바란다. 그래야만 우리말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부채를 위한 변명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거나 세계 경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손쉽게 꺼내드는 통계는 부채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무려 1천600조 원인데 우리나라의 1년 치 국내총생산(GDP)이 1천600조 원 정도이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에 육박하는 셈이다. 방금 ‘무려’와 ‘육박’이라는 표현을 쓴 탓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참 많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가보다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으면 많은 것이고 어느 수준이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500조 원이 넘을 때부터 ‘사상 최대’라거나 ‘위기’ 또는 ‘뇌관’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가계부채는 그로부터 3배가 더 늘었는데 아직도 계속 ‘뇌관’이고 늘 ‘위기’다. 전 세계 국가부채를 다 더하면 7경4천491조 원으로 전 세계 GDP의 80%나 된다. 숫자 자체로만 보면 평소에 들어보지 못하던 단위여서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역시 판단할 근거가 없다. 전 세계 부채가 8경 원이나 10경 원을 넘기면 그때는 위험한 것인가, 그런 기준이 없다면 무슨 근거로 우리는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말이다.

우리는 사람의 혈압이 얼마를 넘어서면 위험하고 당수치가 얼마를 넘기면 그건 큰일이라는 걸 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치가 넘어가면 위험해지는 걸 경험적으로 관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화성에 가서 회색빛이 도는 몸무게 200

킬로그램쯤 되는 동물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동물의 체온을 재보니 21도쯤 되고 맥박은 1분에 14번쯤 뛰고 있다. 이 동물은 병에 걸린 걸까 아닌 걸까.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다.

부채가 어느 수준이면 위기일까

부채라는 게 딱 그런 것이다. 계속 늘어나는 게 불안하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면 안되는 것인지, 어느 수준이면 위기인 것인지, 그럼 부채가 감소하는 게 좋은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 인류 역사상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적도 없고 그럼에도(또는 그 덕분에)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화성에서 처음 만난 동물처럼 우리에게 부채는 늘 생소하고 항상 미심쩍다. 그러나 부채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 한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채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묻는다면 부채는 단연 좋은 것이다.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의 자산과 부가 함께 늘어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서 그냥 통장에 넣어뒀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부채가 1억 원이 생겼지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금융자산 1억 원도 함께 생긴 것이다. 그 1억 원으로 소를 100마리 샀다면 나에게서 부채가 1억 원이 생겼지만 그 1억 원은 소를 길러 판 농부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그 농부의 금융자산이 된다. 만약 세상에 나와 그 농부 둘만 산다면 그 농부는 내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그 소를 팔 곳이 없다. 부채는 그런 것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



려서 땅에 파묻거나 바다에 버리지 않는 한 그걸로 그 어떤 것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든 그 돈은 누군가의 금융자산이 된다. 만약 아무도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인류의 경제활동은 멈추고 만다.

부채는 게다가 대단히 효율적인 수단이다. 부채라는 제도가 없다면 인류는 아직도 달구지를 타고 다니고 주판으로 계산을 했을 것이다. 포드 자동차나 삼성전자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만들 밑천을 모으기 위해 아직도 마차 바퀴를 깎거나 선풍기를 조립하고 있을 것이다. 대출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70세가 다 돼서 겨우 살만한 집을 마련해서 10여년을 거기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대출이라는 제도 덕분에 살만한 좋은 집을 젊은 시절에 일단 구입하고 평생을 갚아가면서 그 덕분에 그 집에서 50년을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모아서 구입하는 것과 구입하고 모으는 것과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그 순서를 바꿔주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은 대부분 비참해진다.

상식이나 선입견과는 다르게 부채는 서민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기반으로 사업을 일으켜 큰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부채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사례를 떠올리면서 부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야기하지만 그가 부채라도 일으키지 못했다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는 미처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부채 그 자체가 아니라 부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또는 그 부채를 갚지 못하는 빈곤 때문인데 우리는 빈곤보다 그를 당장 고통스럽게 하는 부채에 더 초점을 맞춰 비난하곤 한다. 과로로 사망한 근로자를 죽인 주범이 '일자리'라고 비난하는 격이다. 그 일자

리가 없었으면 그 근로자는 과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굶어 죽었을 것이다.

부채가 줄어들면 불경기

우리는 부채가 많아지면 불경기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경기는 부채가 많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부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대출을 받는 걸 꺼리거나 불안해하기 시작하면(부채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게 불경기이고 그게 경제위기의 시작이다. 누군가의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이므로 부채가 줄어든다는 건 자산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계속 마음 편하게 부채를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경기가 좋다'고 표현한다.

부채를 걱정하는 이유도 사실은 부채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부채가 계속 빠르게 늘어나면 그 사실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불안감이 부채를 급격히 줄이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브레이크를 걸자는 뜻이다. 우리에게 부채가 너무 유용하고 고마운 존재인 나머지 어느날이 부채의 공급이 줄어들기라도 하면 '금단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금단현상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실연의 상처가 아픈 이유도, 가족과의 이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도 사라진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채는 좋은 것이다. 너무 많아지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게 부채라서 그게 조심스러운 것일 뿐이다. 

이진우(MBC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네 할 일을 하라!

(Do your job!)



권지윤 기자
SBS 정치부



“20년 넘게 같은 일을 하면서, 후회한 적 없나요?”

기자가 된 뒤, 습관처럼 했던 질문이다. 언론사 선배는 물론, 출입처에서 마주한 공직자들이 주 대상이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훌쩍 넘긴 이들을 향한 경외감에서 비롯됐지만 근원엔 호기심이 컸다. 8년 뒤, 같은 질문을 내가 받으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의 예행연습이랄까.

검찰 고위 관계자의 대답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그는 사건과 정책을 두고 매번 견해차를 보였지만 이 질문엔 비교적 솔직하게 답했고, 후회 대신 사표를 썼던 일화를 털어냈다. 그의 표현대로 혈기왕성했던 검사 2, 3학년 시절, 지청에서 지역 유지를 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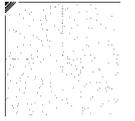
세상 떠들썩한 사건도, 주목 받는 수사도 아니었다. 쉽게 볼 수 있는 토호세력에 대한 단죄였다. 예상 가능하듯 때론 교묘하게, 때론 직접적으로 청탁이 들어왔다고 한다. 피의자를 구속하려 했지만, 결재는 떨어지지 않았다.

하세월로 사건이 지체되자, 참다못해 지청장을 찾아갔다.

지청장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금액만 범죄액에 포함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한마디로 범죄사실을 축소해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라는 뜻이었다. 구공판도 아닌 구속기소가 확고했던 그는 품에 있던 사표를 꺼냈다. 이를 지켜본 지청장은 “OO야, 네가 앞으로 검사 생활을 수십 년 하다보면 더한 일도 있을 텐데, 그때 사표를 내라”며 미소를 보였다고 한다.

클리셰(진부한 표현) 가득찬 이야기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울림으로 남았다. “내가 그때 사표를 거둬들인 후부터 어떤 상황을 겪어도 사표 낼 일로 여겨지는 게 없더라, 용기의 반대는 겁이 아니라 순응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걸까.”

이 대답을 하고 몇 년 뒤, 불명예스럽게 공직생활을 끝낸 그는 20여 년 전 일을 후회할까. 아니면 되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까. 양자택일 앞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



졌다. 다만, 하나는 명확했다. 한번 훼손된 원칙과 신념은 다음엔 더 쉽게, 별 다른 동요 없이 무너진다는 것. 그다음엔 애당초 원칙 자체가 기억에서 삭제된다는 사실이다. 공직생활의 정비례로 수용 가능한 현실은 늘어나는 반면, 반비례로 원칙은 희석되듯 말이다.

‘후회 한 점 덜 수 있다면’

말이 쉽지,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힘들다. ‘인사가 만사’인 공직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7년 남짓 법조 출입을 하면서 만난 공무원들은 타기관에 비해 훨씬 독립성을 보장받는 사법부 또는 준사법기관 소속이었다. 이런 공직자들에게도 원칙 구현은 힘든데, 국회사무처는 어떨까. 국회사무처 공직자들은 입법부 소속이지만, 국회의원과 별개다. 국회사무처법상 지휘 감독의 주체는 ‘국회의장’으로 명시돼 있다. 다수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입법 활동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국회의원의 영향권 밖에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은 다르다. 의장이 집권여당 출신 다선 의원이라는 걸 차치하더라도, 상임위 전문위원을 하면서 위원장, 의원들의 기세, 바뀌 말하면 분위기 또는 유무형의 압력에 휩쓸릴 수 있다. 국회사무처의 독립성·공정성 시비 논란에 기시감이 드는 것도 이런 탓이다. 다만, 이런 현실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장면, 상세히 말하면 ‘회의록’이 있다. 거창하게 ‘현실 극복-원칙 실현의 방법론’으로 표현 못하지만, 적어도 ‘원칙을 지켰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사법농단의 시발점은 2015년 추진된 상고법원이다. 당시 법조 출입을 하며 상고법원 추진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필요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절차적 흠결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헌법상 문제도 불가피했다. 또, 사법근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도,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이 문제가 국회로 번진 지난해 중순, ‘제19대국회’ 당시 상고법원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회의록을 읽어봤다. 활자로 점철된 2015년 회의록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글자들이 있었다. 국회사무처 소속 A전문위원의 발언이었다. 그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도, 회의장에서도 한결같았다. 유일하게 상고법원을 ‘국민 재판권, 민주적 정당성,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봤다. “상고법원이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도 명시했다.

당시 정치 상황, 국회 내부 역학관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힘든 결정이라는 건 짐작할 수 있다. 개정안은 무려 과반이 넘는 여야의원 168명이 동의해 발의된 법안이었다. 게다가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 어떤 로비를 펼쳤는지 서초동까지 풍설이 무성했다. 이런 소문은 뒤늦게 공개된 행정처 문건을 통해 풍설 이상의 ‘노골적 사실’로 드러났다. 최근 검찰이 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국회가 공범인 수준이다.

문제의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A위원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사법농단을 간파해 반대했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분명한 건 헌법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더 큰 권한을 부여받은 의원보다, A전문위원의 행동이 돋보였다는 점이다. A위원마저 죽은 물고기처럼 강물 흐름에 따라 마냥 흘러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장담할 수 없다.

어떤 내심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알지 못한다. 어쩌면 A전문위원 입장에선 국회 일을 하며 겪는 일상다반사 중 하나로 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말 그대로 “Do your job”,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원칙을 지켜가며 자신의 일을 한다고 당장의 미래가 보장되진 않는다. 역사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험칙만으로 알 수 있다. 다만, A위원이 검찰 고위 관계자보다 적어도 두 가지에 있어서 만족할 것으로 확신한다. 공직생활에서 ‘후회 한 점’은 덜어냈고, 떳떳할 수 있다는 것. 🍷

“이제 술 그만 드세요.” 스마트 문신이 알려준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면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가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이론상으로는 이래야 하지만 온갖 친척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는 까딱하면 잔소리 한마당으로 바뀌어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일쑤다.

이런 자리에 딱하니 문신을 하고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 요즘 젊은 층에서는 패션을 위한 문신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나이 많고 보수적인 어른이라면 아직은 못마땅하게 볼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잔소리를 듣기 십상일 것이다.

그런데 미래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문신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가 몸에 문신을 하고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오갈 수 있을 법한 대화를 상상해보자.

“여보, 술 좀 그만 먹어요. 알코올 농도 경고 뒀잖아요.”

“큰어머니도 과일 좀 그만 드셔야겠어요. 혈당이 너무 높아졌네요.”

“요새 문신 색깔이 좀 짙어졌어. 명절 끝나고 병원 가서 검사 받으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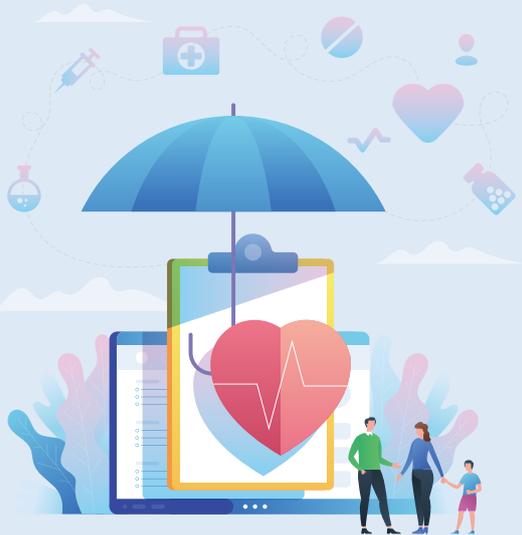
“아유, 내 새끼들. 세뱃돈 줄 테니 문신 좀 내밀어보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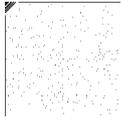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아직 문신은 패션 용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한 스마트 문신을 만들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건강 체크!

가장 유망한 용도는 의료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병을 달고 살게 마련인데,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을 때는 늦을 때가 많다. 평소에도 수시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지만, 병원에 너무 자주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집에서 의료 장비를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스마트 문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센서, 나노물질, 특수 잉크 등을 이용해 신체의 여러 가지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운동할 때는 젖산을 측정한다. 젖산은 근육이 힘을 쓸 때 생기는 물질로, 근육에 쌓이면 피로를 느낀다. 젖산은 땀과 함께 피부로 나오는데, 전기 화학 센서를 이용하면 땀 속 젖산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육의 피로도, 전해질 균형 등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과 연동한다면





운동할 때 몸 상태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특수 잉크로 문신을 새겨 몸의 상태를 바로 보여주기도 한다. 하버드대와 MIT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문신 잉크는 몸 안의 화학 성분과 반응해 색이 변한다. 이들이 개발한 녹색 잉크 하나는 몸 안의 수분이 부족하면 색이 진해진다.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다른 녹색 잉크는 피의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갈색으로 변한다. 당뇨병 환자에게 유용하다.

콜로라도대 연구진은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잉크를 개발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와 피부암을 일으킨다. 야외 활동이 많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야 노화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아무리 경고해도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 쉽다.

이들이 만든 잉크는 파장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파장이 짧은 빛을 많이 받으면 눈에 보이는 색으로 변한다. 사용자가 '경고'를 받고 선크림을 발라 자외선을 차단하면 다시 투명하게 변한다. 널리 쓰이게 된다면 누구나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특수 잉크를 사용한 스마트 문신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배터리 없이도 작동하고, 와이파이가 없어도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영구적인 문신이 싫은 사람을 위해 일정 기간만 유지되도록 개발할 수도 있다. 개인의 건강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정 파장의 빛을 비춰야만 보이게 만드는 방법도 연구 중이다.

한편, 스위스취리히연방공대 연구진은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문신을 개발했다. 원리는 혈액의 칼슘 농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암 발달 초기에는 혈액의 칼슘 농도가 높아진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의 30%는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증상을 겪는다.

이 스마트 문신은 합성생물학을 이용해 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한다. 조작된 세포는 혈액의 칼슘 농도를 상시 측정하며,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멜라닌을 합성한다. 멜라닌

은 피부에 있는 갈색 색소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암이 생겨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스마트 문신이 갈색으로 변한다.

문신으로 결제하고, 게임하고

의료용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스마트 문신을 활용할 수 있다. UC샌디에이고 연구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문신을 개발했다. 알코올 섭취를 자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스마트 문신으로 전기를 만드는 연구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육이 힘을 쓸 때 나오는 젖산은 땀과 함께 배출된다. 젖산을 산화시키는 효소가 들어 있는 바이오연료전지를 만들어 땀으로부터 전기를 만드는 연구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LED 같은 작은 장치에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다.

MIT 미디어랩과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이 만든 듀오스킨은 피부에 붙이는 얇은 금박 장치다. 문신은 아니지만, 피부가 접히거나 움직여도 문제가 없다. 스마트 워치 같은 웨어러블 장치가 피부의 일부가 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듀오스킨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장치를 조종하는 트랙패드나 버튼 역할을 할 수 있다.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넣으면 스마트폰이나 다른 NFC 장치로 정보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신분증이나 교통카드, 입장권 등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스마트 문신이 더 발전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대신 문신으로 지불하거나 은행 거래를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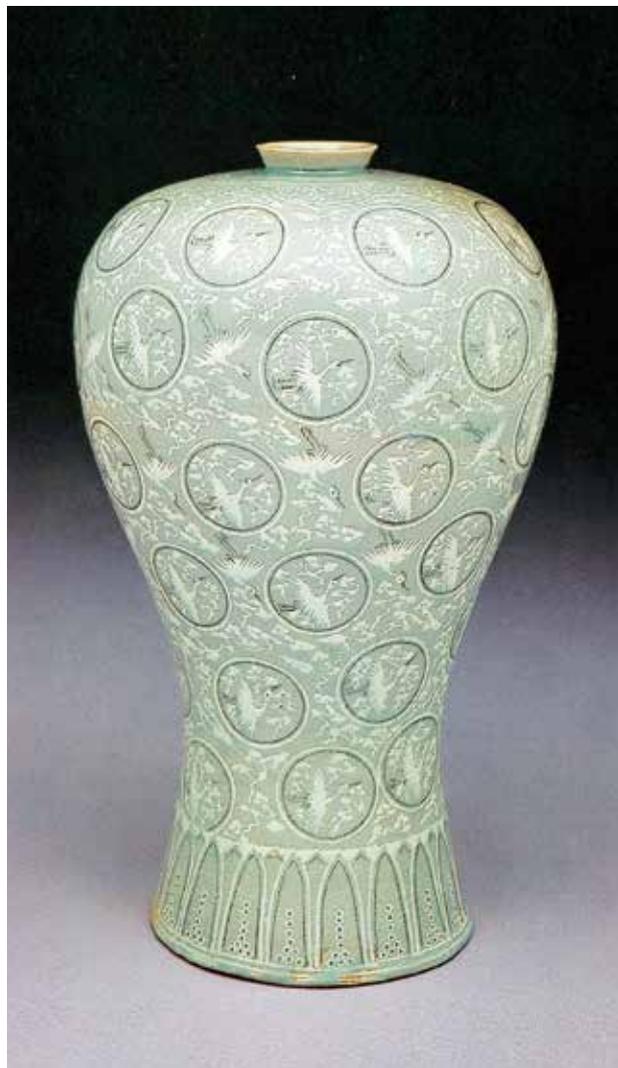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근육이나 신경의 활동을 감지하는 스마트 문신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기술이 가능해진다면, 컴퓨터 인터페이스나 게임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가 사람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인식한다면 표정을 읽어 감정을 추측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리다 미래에는 누구나 하나쯤은 문신을 갖고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매병과 청자 참외모양 병

서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3월 말까지 '삼일운동 100주년 간송특별전 대한콜렉션'이란 전시가 열린다. 일제강점기 간송 전형필(澗松 全鏊 弼, 1906~1962) 선생이 엄청난 재산을 바쳐 수집한 우리 문화재를 선보이는 자리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본 골동품상으로부터 구입

국보 보물이 준비한 간송 컬렉션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국보 68호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매병(靑磁象嵌雲鶴文梅瓶, 13세기, 간송미술관 소장)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실물은 아니더라도 교과서나 미술책에서, 신문 잡지나 길거리 광고에서 한 번쯤 보았음직한 청자 매병. 국보 68호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매병은 당당하고 유려하다. 높이는 41.7cm로, 지금까지 전해오는 고려청자 가운데 가장 큰 편에 속한다. 주둥이는 다소 작고 납작한 듯하지만 어깨는 씩씩하게 벌어졌고 그 어깨를 타고 S자 곡선이 몸통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뻗어 내려온다. 표면엔 학과 구름을 상감기법으로 빼곡하고 정교하게 새겨 넣었다. 여러 개의 원 안에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을, 원 밖에는 지상으로 내려오는 학을 배치했다. 학의 몸짓을 원 안팎에 상승과 하강으로 구분함으로써 생동감과 함께 질서 정연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고려인들의 고고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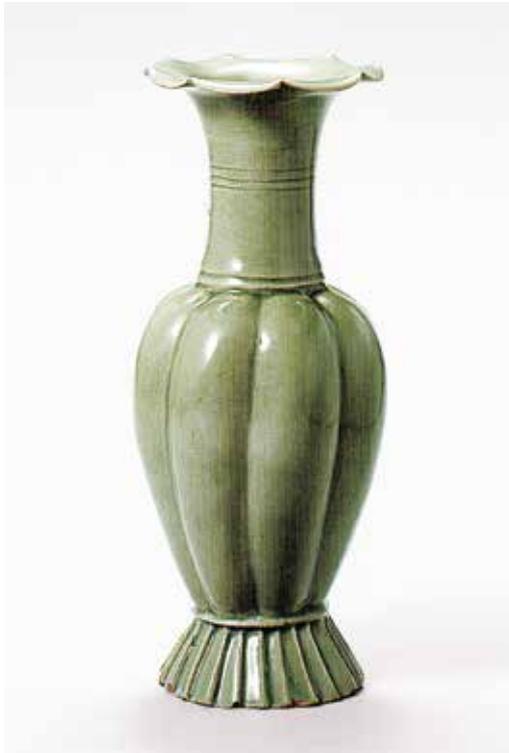


국보 68호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매병



청자 참외모양 병 주둥이

청자 참외모양 병 굽



청자 참외모양 병

신세계를 세련된 미감으로 표현한 청자 명품이다.

이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매병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5년 일본인 골동품상으로부터 2만 원을 주고 구입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당시 서울에서 가장 좋은 기와집 한 채가 1천~1천500원이었다고 하니 2만 원이 얼마나 엄청난 가격이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렇기에 간송의 문화재 수집은 독립운동이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자 매병 자체의 매력과 함께 간송의 스토리가 한데 어울리면서 국보 68호는 우리에게 더욱 익숙한 명품으로 자리 잡았다.

고려 인종 무덤에서 출토된 참외모양 병

그런데 이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청자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94호 청자 참외모양 병(靑磁瓜形瓶, 12세기)이다. 이 청자 참외모양 병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고려 17대 임금인 인종(仁宗, 1109~1146)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황통육년(皇統六年)’이라고 연대가 표기된 시책(諡冊)과 함께 발견되었다. 황통 6년은 1146년으로, 제작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청자는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고려청자 전성기 12세기에 만들어진 이 청자 참외모양 병은 이름 그대로 참외 모양을 형상화했다. 몸체는 참외 모양이며 그 위로 목을 길게 붙이고 주둥이(입)를 여덟 장의 꽃잎으로 표현했다. 그 꽃잎은 참외꽃잎 같아 보인다. 참외 모양의 몸체 밑으로는 치마 주름을 연상시키는 굽이 연결되어 있다. 전체 높이는 22.7cm, 입 지름은 8.4cm. 전문가들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의 고려청자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국보 94호 청자 참외모양 병은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단정한 형태에, 투명하고 깊은 비색(翡色)이 두드러진다. 참외 모양의 몸체는 단순하면서도 날렵하다. 몸체의 오목하게 들어간 골 사이로 참외의 몸집이 팽팽하게 드러났다. 참외의 양감과 탄력이 두드러져 생동감이 넘친다. 이런 참외를 한가운데 두고 아래로는 높직한 굽이 치마 주름 모양으로 받치고 있으며 위로는 여

뿔 장의 꽃잎이 아름답게 짝 펼쳐져 있다. 참외와 꽃잎, 치마 주름이 한자리에서 만나 멋진 디자인을 완성했다. 몸통과 굽, 몸통과 주둥이가 서로 대비와 조화를 이루며 긴장감과 함께 경쾌함을 전해준다.

이 청자 참외모양 병엔 별다른 장식이 없다. 오직 형태와 비색만으로 아름다움에 승부를 걸었다고 할까. 그 건 놀랍고도 대범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이 시대를 초월하는 것은 깊은 비색 때문만이 아니라, 정교한 상감기법 때문만이 아니라 단순한 듯 과감하고 세련된 조형미도 한몫하고 있음을 이 참외모양 병이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모양의 청자 즉 참외모양 청자는 꽤 많이 전해온다. 중국에서도 많이 제작됐다. 하지만 색감은 물론 전체적인 조형미에서 국보 94호가 단연 독보적이다. 참외와 꽃잎, 치마 주름의 크기와 비율이 가장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참외의 양감이 팽팽하지 않고 빈약하다면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상실해 참외모양 병은 웅색하게 보일 것이다. 반면 참외가 너무 통통하다면 그 반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보 94호는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국보 94호 청자 참외모양 병의 매력은 국보 68호 청자 상감 구름 학무늬 매병과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보 68호 청자 매병은 육중한 곡선미와 정교하고 화려한 상감 무늬가 돋보인다. 국보 68호는 당당하고 유려하지만 시종 고풍스러워 현대적인 미감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애초부터 학과 구름이라고 하는 불교적이면서도 도교적인 요소를 표현함으로써 귀족적인 철학과 미감을 청자에 구현했다.

그러나 국보 94호 청자 참외모양 병의 미감은 국보 68호와 많이 다르다. 참외라고 하는 일상적인 대상을 디자인의 모티프로 삼았고 그것도 별다른 장식 없이 단순히

게 표현했다. 그래서 편안하고 부담이 없다. 그러면서도 세련된 형태를 구현함으로써 경쾌함과 유쾌함을 발산한다. 일상의 요소를 절제된 미감으로 표현했다는 점, 이것은 현대적인 미감과 통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국보 68호 청자 매병에서 발견할 수 없는, 고려청자의 또 다른 미감이 아닐 수 없다. 청자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이 청자 참외모양 병을 보면 현대 공예로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이 참외모양 청자를 재현한 작품들, 이를 모티프로 삼은 문화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코카콜라 병과 유사점 있어

국보 94호 청자 참외모양 병은 보는 이를 유쾌한 상상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다름 아닌 코카콜라의 세계다. 치마 주름 모양의 높은 굽과 참외 모양의 몸통은 코카콜라 병의 곡선과 많이 닮았다. 카카오 열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는 코카콜라 병. 1915년 처음 만들어진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을 보면 청자 참외모양 병과 흡사한 면이 있다. 특히 코카콜라 병의 가운데 몸통 부분이 더욱 그렇다. 보면 볼수록, 어쩌면 저렇게 분위기가 비슷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코카콜라 병은 지금까지 원래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100년 넘게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카카오 열매를 디자인으로 끌고 들어와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이리라. 이런 정황은 놀랍게도 우리의 12세기 청자 참외모양 병과 닮아 있다. 참외 모양의 이 청자가 왜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현대적인 미감을 발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100여 년 전 코카콜라 병의 디자이너가 청자 참외모양 병을 직접 보았을 리는 없겠지만, 둘 사이엔 분명 유사점이 있다. 흥미롭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글. 이광표 교수(서원대 문화유산학)

신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장외투쟁 나서



신민당 헌법개정추진위원회 전남지부 결성대회 장면(1986. 3. 30.)

1985년 2월 13일 아침, 신문사는 ‘신민당, 제1야당으로’라는 제하의 호외(號外)를 발행했다. 호외란 신문사가 긴급한 뉴스를 속보로 전하기 위해 정기호(定期號) 외에 임시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신문사에서 총선결과를 두고 호외를 발행하기는 제12대국회 총선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호외 내용은 신한민주당(신민당)이 창당 25일 만에 제1야당으로 등극했다는 것이었다. 신민당은 양김(김대중·김영삼)씨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를 모태로 태어난 정당으로 창당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1야당이 된 것은 가히 민심에 의한 ‘선거혁명’이라 할 만한 중대 사건이었다.

총선 후 신민당은 등원의 선결과제로 김대중씨 사면

복권과 총선 인책, 구속학생 석방 등을 내세우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리고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정감사권 부활, 지방자치제 실시, 언론기본법 폐지와 노동관계법 개폐 등의 실행을 위해 원내외 투쟁에 들어갔다.

1986년 2월 12일, 신민당 창당 1주년을 맞아 당사에서 개헌추진위원회 시도지부 결성을 전격적으로 선언하며 ‘1천만 개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통령 직선제 실행을 위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신민당이 개헌추진서명운동을 시작하자 경찰은 당사와 민주협을 봉쇄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추진지부 결성식을 계속했고 결성식에는 대규모 군중이 모여들었다.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일인 5월 3일에는 학생과 노동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격렬한 투석전이 벌어져 대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계속된 개헌 투쟁은 1987년 6월항쟁을 거쳐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고비를 맞게 된다. 여야간의 협상을 거쳐 10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이 마무리됐다. 

글. 김종해

임 그리는 자줏빛 사랑이야기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의 자취를 찾아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있다. 숙부 세조에 의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어린 임금 단종, 서인으로 강등되어 궁에서 쫓겨나 살아야 했던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가 서린 길을 걷는다. 생이별 끝에 머나먼 영월 땅에서 들려온 소식, 사랑하는 임의 죽음. 60여 년 세월 임 그리는 자줏빛 마음을 품고 살다 82세에 세상을 떠난 정순왕후 송씨의 아련한 자취.

낙산공원
한양도성 성곽과
성곽 아래
정수마을





생의 마지막 이별 장소, 영도교

청계천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이 한파주의보보다 더 혹독하다.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현장의 생동감이 셔터를 통해 감지 끝에 전달되고, 그 느낌은 고스란히 심장에 박힌다.

옛 청계천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빨래를 했던 자리에 빨래터를 재현했다. 수양버들 긴 가지가 태질하는 물가에서 오리 두 마리가 흑한도 아랑곳하지 않고 논다. 오리를 따라가던 길에서 영도교를 만났다.

조선 6대 임금 단종은 국가 운영과 정치의 격동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린 열한 살 때 즉위했다. 당시 권력의 양대 세력이었던 김종서와 수양대군의 대립 정국의 긴장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종서와 안평대군 등 반대파와 형제들을 죽인 수양대군은 왕의 자리까지 넘보았고, 어린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1457년(세조 3년) 음력 6월 단종과 그의 부인 정순왕후 송씨는 청계천 영도교에서 생의 마지막 이별을 하고 있었다. 다시는 못 볼 것을 알면서 헤어져야 했던 정순왕후 송씨의 그때 나이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 열여

덥 살이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사랑이 넘쳐날 시절에 헤어져야만 했던 청춘 남녀의 애절한 마음에 오뉴월 더위에도 서릿발이 내렸을 것이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영도교 아래 청계천에 그저 얼음이 얼었고, 바람이 불고, 오리가 놀고, 움츠린 어깨를 서로 보듬은 청춘 남녀들은 오가고...

영도교로 올라와서 동묘벼룩시장을 지난다. 한때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했을 온갖 골동품과 잡동사니들이 또 다른 주인을 기다린다. 사람들 넘쳐나는 벼룩시장 거리 한쪽에 조선시대 여인시장이 있었다고 전한다.

동망봉에 새긴 영조 임금의 마음

궁궐에서 쫓겨난 정순왕후 송씨는 정업원(현 청룡사)에서 살았다. 정순왕후 송씨를 도왔던 사람들 중에는 동대문 밖 여인시장 사람들도 있었다. 여인시장은 여인들과 아이들만 드나들 수 있던 시장이었다고 한다.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담장 아래 여

청계천
영도교



정업원 터와
청룡사



동망각



인시장 터를 알리는 꽃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여인 시장이 있었던 자리를 밝힐 만한 뚜렷한 역사 자료가 없어서 꽃돌을 치운 모양이다.

벼룩시장을 빠져나와 넓은 도로를 건너 복잡하게 얽힌 골목길을 지나 송인근린공원으로 올라간다.

송인근린공원에도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가 남아 있다. 송인근린공원 남쪽에 동망정이 있다. 정순왕후 송씨가 유배지 영월에 있는 단종을 그리며 올랐던 동망봉에 세운 정자다.

송인근린공원 북쪽에는 동망각이 있다. 동망봉 아래 보문동에 살던 사람들이 정순왕후 송씨의 넋을 기리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제를 올리던 곳이었다. 원래는 보문동6가 209-192에 있었는데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고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세웠다.

동망각 위 체육공원 한쪽에 동망봉을 알리는 꽃돌이 있다. 꽃돌에는 정순왕후 송씨가 매일 단종의 명복을 빌었던 곳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단종 또한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서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워했다고 한다. 삼면이 강물로 둘러

싸인 청령포 한쪽은 벼랑이다. 그 벼랑에 올라서면 하늘이 열린다.

훗날 영조 임금은 단종과 정순왕후 송씨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정순왕후 송씨가 살던 정업원 옛터에 비석을 세운다. ‘정업원 옛터 신묘년 9월 6일에 눈물을 머금고 쓰다’, ‘앞산 바위 천만 년을 가오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영조는 정업원 터에서 보이는 산 절벽에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써서 새기게 했다. 그곳이 바로 현재 송인근린공원이 있는 산 절벽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채석장이 생기면서 동망봉이라는 글씨는 완전히 사라졌다.

마음에 물들던 자줏빛 그리움

송인근린공원을 뒤로하고 청룡사로 향한다. 정업원 터

동망봉 꽃돌





에 영조가 세운 비석은 문이 잠겨 들어가 볼 수 없어서 밖에서 비각만 보고 돌아섰다. 청룡사로 내려왔던 길로 다시 올라가서 사거리에서 좌회전한다. 명신초등학교 담벼락을 지나면 비우당과 자주동샘이 나온다.

비우당은 조선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지봉유설’을 쓴 이수광이 살던 집이다. 이수광이 살기 전에는 조선 초기 청백리로 알려진 유관이라는 사람이 살았었다. 유관이 살 당시 초가지붕이 새자 우산을 받치고 살았다는 일화가 전한다(그래서 집 이름을 비우당이라고 했다). 이후 집은 외손인 이수광의 집안으로 상속됐고, 임진왜란 때 집이 불타 사라진 뒤 이수광이 새로 집을 지었다고 전한다. 비우당은 원래 현재 창신동 쌍용아파트 단지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의 자리에 옮겨 지었다.

비우당 울타리 안 커다란 바위 아래 작은 샘이 있다. 주민 말에 따르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샘에 물이 차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물이 말랐다. 이 샘이 정순왕후 송씨가 빨래를 하고 옷감에 물을 들이기 위해 찾았던 샘이라고 한다.

당시에 이곳에서 빨래를 하면 빨래에 자줏빛 물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아마도 샘이 있는 옛 마을 이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샘이 있던 곳의 옛 마을 이름이 자지동(紫芝洞)이었다. 자지(紫芝)란 지치라는 식물을 말한다. 지치를 지초라고도 하는데, 옷감 따위에 자줏빛 물을 들이는데 사용하거나, 한방에서는 약재로도 쓰이고 술을 담가 먹기도 한다. 아마도 이 마을에 지치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다. 지치에서 우려낸 자줏빛 천연색소가 물에 풀어져 빨래를 물들였을 것이다.

아니면 열일곱 나이에 떠나면 타향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임, 단종을 그리워하며 60여 년의 여생을 살아야 했던 정순왕후 송씨의 마음을 물들인 자줏빛 그리움은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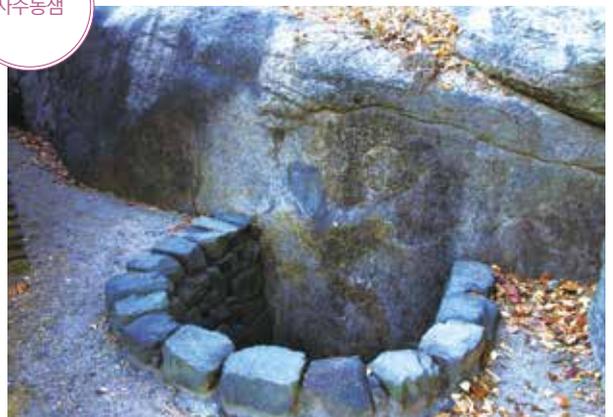
정순왕후 송씨는 열다섯 살에 왕비에 책봉되었다.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난 뒤 폐비가 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났다. 열여덟 나이에 입을 여의고 정업원에서 지내면서 평생 입을 그리워하다 82세에 세상을 떠났다. 

글. 사진. 장태동(여행작가)

비우당



자주동샘



국회, '정치 개혁' 등 논의

2019. 1. 1 ~ 1. 31

- 1 ▶ 문희상 국회의장, 서울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신년하례회를 갖고 "올해는 한반도 평화의 대 전기이자 천재일우의 기회"라 강조
- 2 ▶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저성장·불평등 극복 위한 혁신·대타협' 강조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소집 요구
- 3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해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혀
- 4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올해 첫 회의 열었으나 국회의원 정족수 확대 문제를 두고 이견 보여
- 7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국회 사랑제에서 국회의장 주최로 '초월회' 모임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 등을 위해 함께 미국 방문 추진을 논의하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도 논의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집 등 쟁점 현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 찾지 못해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30년 만에 개편
- 8 ▶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한국대사·정무수석비서관에 강기정 전 국회의원·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
▶ 조선중앙방송,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10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적자 국제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키로
- 9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에 대해 현안 보고·질의
▶ 행정안전위원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정수를 60명 더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에게 전달
- 10 ▶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열고 올해 국정 목표를 직접 설명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 11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
- 13 ▶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불허
- 14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다음달 27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현행 단일 집단지도체제(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 15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입당
- 16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 국회에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과 서영교 의원의 '판결 청탁' 논란과 관련해 당 사무처 차원의 조사에 착수키로
- 17 ▶ 대법원,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해
- 18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 받아
- 20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기자회견에서 탈당한다고 밝혀
- 21 ▶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당론 채택
▶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
- 23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국회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 발표
- 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한 혐의로 구속

정리. 김종해

공정한 국회뉴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www.naon.go.kr에서 생생한 국회 소식을 만나보세요.

새봄맞이 심기일전

신춘(新春)이면 민족의 영산 태백산(1,567m)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며 심기일전(心機一轉)의 각오를 다집니다. 1월 눈꽃축제가 열린 태백산을 종주했죠. 많은 이들이 몰려 심심산골이 인파로 넘쳤습니다. 오르는 동기나 목적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새해, 신춘을 맞아 결의를 다졌을 것입니다.

국회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국회 전신) 개원 100주년인 기해년 1월 29일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2019 국회 신춘음악회/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라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로 꾸미는 고품격 음악회를 지향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각오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입법·사법·행정부 고위인사들과 국민 등 500여 명이 함께 어울려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특히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음악회장 정면 주요 자리에 모셨습니다. 공연에서는 우리의 소리가 얼마나 우수한지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새해, 특히 설에는 각종 새봄맞이 의례를 가졌습니다. 설날에는 세배를 다녔고,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는 연날리거나 쥐불놀이 등 여러가지 놀이를 통해 공동체 화합을 다지고, 세대간 문화도 전수했습니다. 액막이 풍습도 있었죠. 지금도 이러한 전통 문화는 면면히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올해 목표 맨 앞에는 국민신뢰 회복이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은 새해 공식 자리가 있을 때마다 지난해에도 국회가 국민 신뢰도 최하위 기관이었다는 오명을 의식한 듯 “1%라도 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국회사무처와 기관 종사자들도 모두 강한 사명감과 대국민 봉사 정신으로 심기일전하여 추락한 신뢰회복에 나서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만약 국회와 종사자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호되게 질책하여 주시되, 잘하는 일이 있을 때는 따뜻한 격려도 잊지 말아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독일 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능한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치의 중요성을 설교했습니다. 정치의 중심 국회는 이 정신을 늘 새길 것입니다. 🍀



이춘규
홍보기획관·편집인



국회아트갤러리 작품전

〈못다 핀 꽃〉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미술수업

- 기 간 : 2019. 2. 11 (월) ~ 2019. 2. 28 (목)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 작 가 : 이경신
- 전시품 : 〈못다 핀 꽃〉 등 연필화 30여점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2296



국회문화극장

〈말모이〉

- 일 시 : 2019. 2. 21 (목)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출 연 : 유해진, 윤계상, 김홍파, 우현, 김태훈, 김선영, 민진웅, 송영창, 허성대 등
- 상영시간: 135분 / 등 급: 12세 관람가 / 감 독: 엄유나
- 예 약 : 국회문화행사홈페이지(<http://culture.assembly.go.kr>)를 통해 2월 13일부터 예약 가능 (1인 최대 2인까지 예약가능)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3111~2



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